

발간등록번호

11-1543000-100582-10

20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 E20-2025-04

20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5.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목차

CONTENTS

Chapter I

일반 현황 / 1

Chapter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 11

1. 정책 점검·평가

1.1.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5
1.2. 사전협의를 운영 지원	26
1.3. 농어촌 영향평가	29
1.3.1. 도·농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	30
1.3.2. 식품사막 최소화	40



2. 조사·연구

2.1. 202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51
2.2. 2025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61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	70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83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89
3.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홍보	91



CHAPTER

I



일반 현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소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의견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부처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25명 이내(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04. 0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5. 04.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09. 12.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0. 0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012. 0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 2014. 06.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 2014. 1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5. 07.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
- 2016. 0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 2016. 1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17.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8.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09.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20. 0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20.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05.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06.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 2021. 1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2. 0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 2022. 1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2.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3. 06.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 2024. 0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4. 06.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 2025. 0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생활권기반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5. 0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25. 05.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 2025.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 전문지원기관 개요 및 연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와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 농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농어촌 환경 및 주민 정책 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인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분석 결과와 정보를 제공한다.
 -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혁

- ▶ **2012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2012년 4월 19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3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4년**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5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
(2015년~2019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85호(2015년 3월 17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2015년 7월 1일)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2015년 7월 21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5년 7월 21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2015년 12월 29일)
- ▶ **2016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6년 12월 23일)
- ▶ **2017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7년 12월 13일)
- ▶ **2018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연구(7개 부문)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8년 12월 19일)
- ▶ **2019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19년 7월 2일)
·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지원(2019년 9월 24일~26일)

- ↘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 (2020년~2024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101호(2020년 2월 28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26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20년 6월 30일)
- ↘ **2021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27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21년 10월 26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21년 12월 16일)
- ↘ **2022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 농어촌 영향평가 2건 수행
· 사전협의제도 제도화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2건 수행
· 2022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2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
· 제28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22년 11월 30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22년 12월 20일)
- ↘ **2023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202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 농어촌 영향평가 2건 수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2건 수행
· 2023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포럼 개최
1차: 2023년 10월 27일 / 2차: 2023년 11월 17일 / 3차: 2023년 12월 5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23년 12월 21일)



↘ 2024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202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 농어촌 영향평가 2건 수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1건 수행
- 2024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24년 12월 17일)

↘ 202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
(2025년~2029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556호(2024년 12월 30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202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지원
- 농어촌 영향평가 2건 수행
- 사전협의제도 운영 지원
- 2025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
- 삶의 질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25년 12월 11일)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개요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의 전담부서로 2015년 7월 1일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中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축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 '12.5.~) 내에 전담부서로 '삶의질정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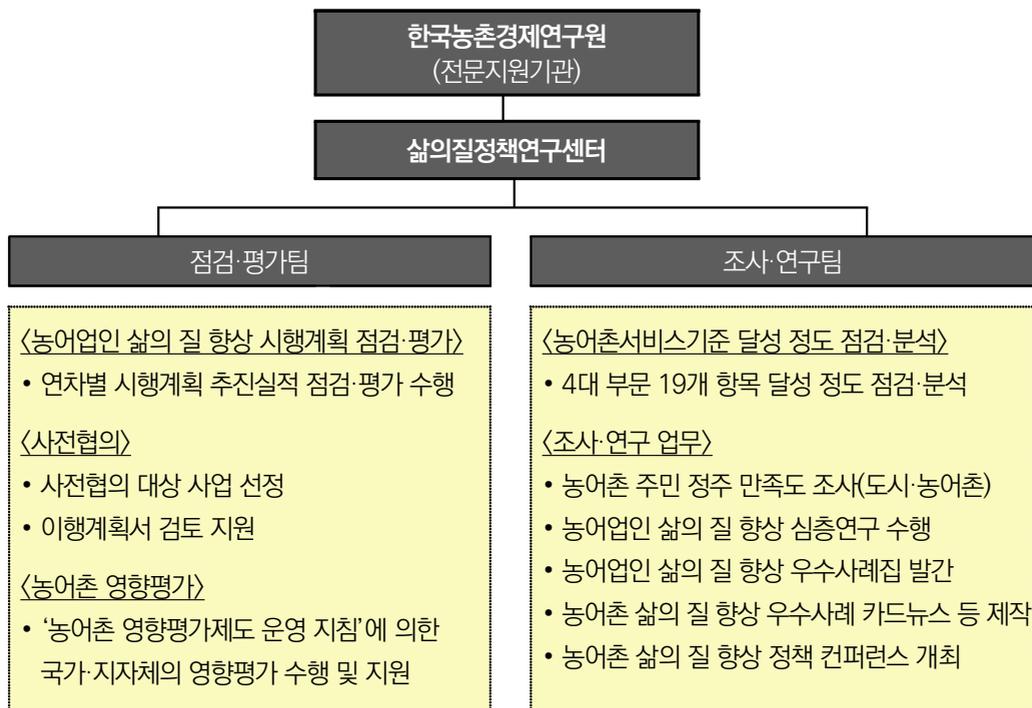
□ 주요 업무 및 조직 구성

-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사전협의 등 「농어업인삶의질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기본계획 기간 중 연차별로 수립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 항목을 설정하고, 부문별 세부 항목에 대한 달성 정도를 점검·분석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중장기 계획 및 정책, 사업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생활 실태 및 정주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시 지역과 비교·분석하고, 정책 성과를 진단하는 한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국책연구기관 및 시·도 연구원으로 구성된 삶의 질 향상 정책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전문 분야에 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정책의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 **(사전협의)**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 운영)**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과제 발굴 등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련 연구 경험과 성과를 확산시킨다.
- **(기타 지원 업무)**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 개최,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 등 삶의 질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점검·평가팀과 조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PTER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1. 정책 점검·평가

1.1.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2. 사전협의 운영 지원

1.3. 농어촌 영향평가

1.1.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점검·평가 개요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추진 내용과 실적을 매년 점검·평가한다.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¹⁾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

-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202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의 4대 전략별 과제 175개에 대해 실시되었다.
 - 제4차 기본계획상 기존의 전체 과제 178개 중 기종료 과제 23개, 지방이양 과제 5개 등 28개 과제를 제외하고, 25개의 신규과제를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였다.

1)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대한 규정 및 자세한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농어업인삶의질법」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참조.



〈 신규 점검·평가 과제 목록 〉

과제번호	과제명	담당부처
1-1-1-3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1-1-4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1-2-7	농촌형 보건의료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1-2-1-3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1-2-1-4	지역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3-1-4	가족센터 건립 (지역자율계정)	여성가족부
1-3-1-5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
1-3-1-6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1-3-2-4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2-3-1-5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2-2-6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3-2-2-7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3-3-1-5	어촌신활력 증진	해양수산부
3-4-1-7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영농폐기물재활용촉진)	환경부
3-4-1-8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환경부
4-1-2-6	꾸러미사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4-2-1-7	관계인구 형성지원(농촌형 워케이션)	농림축산식품부
4-2-1-8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환경부
4-2-1-9	지역관광 다양성(섬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4-3-1-8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4-3-2-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브랜드 창출	중소벤처기업부
4-3-3-11	산촌활력 특화	산림청
4-3-3-12	국유림 활용 산촌 활성화	산림청
4-3-3-13	미래 산림인 육성 지원	산림청

❖ 점검·평가 체계 개편

- 202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제4차 기본계획 (2020년~ 2024년)’에서 제시된 시행계획 점검·평가 절차의 운영 방안을 따르되, 2025년부터 도입되는 ‘제5차 기본계획’에서의 평가체계 개선 방향에 따라 변경된 평가체계를 적용하였다.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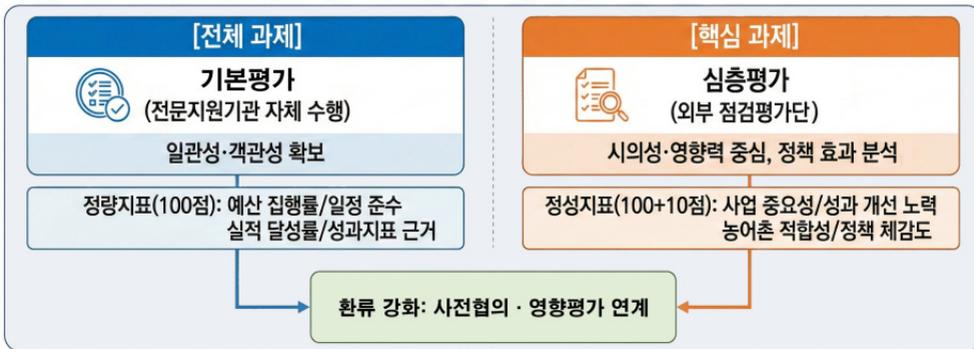
-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시행계획 전체 과제에 대한 기본평가, 핵심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43인)의 심층평가로 이원화하였다.
-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는 향후 농어촌영향평가 및 사전협의 등 정책 환류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체계 개편 사항 〉

■ 1차~4차 시행계획 점검·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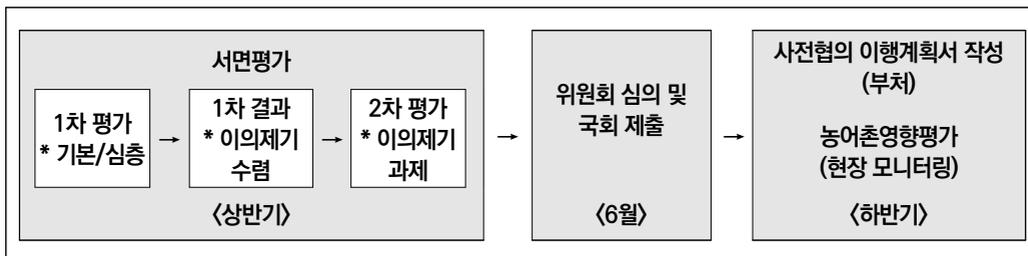


■ 제5차('25-'29) 평가 체계 개편안: 성과 중심의 이원화 평가



- 202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향후 농어촌영향평가 등 삶의 질 정책의 환류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 202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절차 및 흐름도 〉





❖ 점검·평가 방법

-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전체 과제에 대한 기본평가와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평가로 이원화하여 수행되었다.
- **(기본평가)** 2024년 시행계획 175개 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한 기본평가는 전문지원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00점 만점의 정책 수행도로 정량지표화하여 95점 이상을 ‘우수’, 95점 미만 70점 이상을 ‘보통’, 70점 미만을 ‘개선필요’ 과제로 분류하였다.
- **(심층평가)** 점검·평가단의 각 평가위원은 담당 과제의 추진실적 자료에 근거하여 제공된 평가 양식에 따라 2024년 핵심과제의 정책 수행도 및 정책효과를 정성평가하였다. 핵심과제는 제4차 기본계획의 부문별 성과지표와 직결된 23개 과제로 선정하였다.

〈 제4차 기본계획 전략 부문별 핵심과제 〉

전략 부문	16대 추진과제(정책군)	핵심과제	성과목표
보건·복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 사회적 농업 활성화	- 돌봄 활동 추진 사회적 농장 운영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 농지연금 가입 건수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교육·문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지원 -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활성화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평생학습도시 운영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 농어촌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 농어촌 지역 체육공간 지원 건수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건수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계속)

전략 부문	16대 추진과제(정책군)	핵심과제	성과목표
정주생활 기반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 대중교통 조정을 통한 가·종점 간 연 계 시스템 - 고령자 교통안전수칙 방문교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 농어촌 지역 시군단위 하수도 보급률 - 빈집 정비 건수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 농어촌 복합서비스거점 구축 - 고령자 복지주택·마을정비형 공공임 대주택 구축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구축 -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육성
경제활동· 일자리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 설립
	농어촌 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 방문객 수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 귀농·귀촌인 창업 컨설팅 지원 -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육성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 농촌 고용인력 지원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농업인력중개·어업인 일자리 지원센 터 운영

주: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정책군의 2개 과제는 기종료되어 202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이원화된 각 평가항목과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202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항목 〉

기본평가(전체 과제)		심층평가(핵심 과제)		
구분(배점)	평가 항목	구분(배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1. 운영 적절성 (40)	1.1. 예산 집행률(%) 1.2. 사업 일정 준수 여부	1. 정책 수행도 (40)	1.1. 사업의 중요성 1.2. 성과 달성 및 사업개선 노력	•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시급성 • 시의성
2. 운영 성과(50)	2.1. 사업 실적 달성률(%) 2.2. 사업 성과지표 근거 유무 2.3. 예산 확대 여부 2.4. 대상 확대 여부	2. 정책 효과(60)	2.1. 농어촌 적합성 2.2. 정책 체감도	• 사업 규모의 적정성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체감 효과 • 삶의 질 향상도
3. 환류 및 확산 노력(10)	3.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 3.2. 언론보도 및 홍보 실적	3. 가점(10)	타 사업 연계 및 주민참여	• 타사업과의 연계 노력 • 주민참여 정도



❖ 기본평가 결과

- 175개 전체 과제에 대한 기본평가 결과, 평균 88.6점으로 대체로 정상 추진하였다. 평가 등급은 우수 41개, 보통 132개, 개선필요 2개 과제로 평가되었다.
- **(보건·복지)** 46개 과제 중 우수 16개, 보통 30개 과제로 분류되었으며, 개선필요 과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 **(교육·문화)** 22개 과제 중 우수 5개, 보통 16개, 개선필요 1개가 각각 도출되었다. 개선필요로 분류된 과제는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 **(정주생활기반)** 66개 과제 중 우수 8개, 보통 57개, 개선필요 1개가 각각 도출되었다. 개선필요과제는 2022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어 자료를 통한 2024년도 추진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 **(경제활동·일자리)** 41개 과제 중 우수 12개, 보통 29개로 분류되었으며, 개선필요과제는 없었다.

❖ 심층평가 결과

□ 심층평가 결과 요약

- 23개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평균 72.8점으로 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양호하였으나,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 **(보건·복지)** 5개 핵심과제의 평균 점수는 82.7점으로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전반적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교육·문화)** 4개 핵심과제의 평균 점수가 64.2점으로 주민역량 강화 및 문화향유의 기반을 제공하였으나,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정주생활기반)** 8개 핵심과제의 평균 점수는 61.7점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중요성이 높으나 주민 참여 기회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하여 체감도가 낮고,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 **(경제활동·일자리)** 6개 핵심과제의 평균 점수는 85.0점으로 정책 참여자의 의견수렴 및 타 사업과의 연계 등 직·간접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 정책 수행도 심층 평가 결과

- **(보건·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사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성과지표는 각 과제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었지만, 일부 지표의 목표치를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설정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교육·문화)**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정합성과 실효성 간 괴리가 발생하며, 성과지표가 복합적 목적과 정성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층적 지표 체계 도입과 지역 실정 반영, 평가 및 환류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표 개선을 위한 구조적 노력이 미흡하여 정책 개선 의지가 실제 성과관리 체계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정주생활기반)**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들의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과제를 제외한 대부분 과제의 성과지표와 정책 개선 노력은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경제활동·일자리)** 성과지표는 각 사업 특성에 맞춰 설정되었으나, 단기적이고 양적인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장기적이고 질적인 지표 추가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정책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사업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일부는 환류까지 이어져 긍정적인 반면, 일부는 의견 수렴에 그쳤다.



□ 정책 효과 심층 평가 결과

- **(보건·복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다. 사업 규모 역시 목표와 계획에 맞춰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나, 인구구조 변화나 지역 특성,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일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들은 대체로 농어촌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이라는 종합 목표에 기여하였다.
- **(교육·문화)** 중앙 주도적 설계, 지역 인프라 및 역량 격차, 분산된 행정 책임으로 인해 현장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농촌 맞춤형 전달체계 실행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인구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속에서 정밀한 자원 배분과 전략적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요기반 예산 확대, 지역 형평성 확보, 농촌 맞춤형 사업 설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반적으로 일부 긍정적 성과를 냈지만, 단기 성과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의 파급력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정주생활기반)** 대부분 농어촌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및 전달 체계를 갖추고 적정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략 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사업 효과를 보였다.
-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잘 이루어졌다. 대체로 소득향상, 청년농 정착,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직간접적 성과를 보였다. 다만 사업 규모에 있어 주민 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고, 예산 확대, 서비스 접근성 제고, 탄력적 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주민참여 및 타 사업과의 연계 성과 심층 평가 결과

- **(보건·복지)** 전반적으로 주민참여 유도 및 타 사업 연계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과제를 제외하면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여 정책 추진의 개방성과 연계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Ⅱ.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 **(교육·문화)** 일정 수준의 주민참여와 타 사업 연계 시도가 있었으나, 그 수준이 제한적이며 제도화된 구조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행방식에서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려는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고, 일부 사업은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거나 참여 기반이 약해 지역사회 전체로의 확산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 **(정주생활기반)** 대부분의 핵심과제는 주민참여 및 타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경제활동·일자리)** 대부분 과제는 전반적으로 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업 구조가 구축되어 있으며, 일부 과제에서는 지역 단위 실행 주체 및 주민과의 연계성과 참여 기회가 구체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사전협의 연계

-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2025년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하고, 사전협의 운영을 지원하여 정책 환류를 수행하였다.

〈 2024년 시행계획 핵심과제 심층평가 결과 〉

과제번호	과제명	심층평가 점수			사전협의 연계
		정책 수행도 (40)	정책효과 (60)	합계 (100)	
1-1-1-2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36.7	53.3	90.0	
1-2-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35.0	41.7	76.7	
1-3-1-1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1.7	46.7	78.3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35.0	53.3	88.3	
1-4-3-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35.0	45.0	80.0	
2-1-1-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28.3	38.3	66.7	
2-2-2-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활성화	30.0	38.3	68.3	
2-2-2-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31.7	40.0	71.7	
2-4-1-1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20.0	30.0	50.0	
3-1-2-2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26.7	40.0	66.7	○
3-2-2-2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26.7	41.7	68.3	
3-2-3-1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35.0	45.0	80.0	
3-3-1-1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	30.0	36.7	66.7	
3-3-3-2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복지주택)	23.3	35.0	58.3	
3-3-3-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1.7	3.3	15.0	
3-4-1-1	농어촌 폐기물 수거 처리 개선	25.0	35.0	60.0	○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30.0	48.3	78.3	
4-1-1-1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36.7	53.3	90.0	
4-2-1-1	농촌관광 활성화	35.0	35.0	70.0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36.7	51.7	88.3	
4-3-3-1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35.0	46.7	81.7	
4-4-1-1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38.3	46.7	85.0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38.3	56.7	95.0	

* 사업개편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22년 이후 신규 추진내역이 없어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익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추진계획 수립·준비

- 2025년 하반기에는 2026년 상반기에 수행할 2025년도 점검·평가를 위해 심층 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2025년도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시행계획 제출 서식을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무국과 협의하였으며, 사무국을 통해 소관부처에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 제5차 기본계획('25~'29)에서 개편된 평가체계에 따라 180개* 세부과제에 대한 기본평가, 30개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평가로 이원화하였다.
- * 일부 세부과제 묶임으로 총 202개 과제 취합 예정

〈 2025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세부 추진 절차 〉

추진 시기	업무	업무 세부 내용	
1월	점검·평가단 구축 및 평가자료 취합·정리	- 전체과제에 대한 평가자료 취합·정리 - 핵심과제별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가 점검·평가단 구축 - 과제당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2월~4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 전체과제에 대한 기본평가 및 점검평가단을 통한 심층평가(1차)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이의제기 검토 및 보완평가(2차) - 정책군별 종합평가	
4월~5월	점검·평가 결과 도출 및 삶의질위원회 안건 작성 지원	-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질위원회 안건 작성 지원 -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당해년도 시행계획 안건 상정	
6월~7월	점검·평가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 - 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한 최종보고서 발간	
8월	익년도 점검·평가 추진 준비	사전협의 연계	- 사전협의 이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점검·평가 결과 제공 등
9월~10월		평가항목 및 과제 검토	- 평가항목 개선사항 및 심층평가 대상 과제(안) 검토
11월		평가위원 명단 검토	- 심층평가 대상 과제(안)에 따른 차기 점검·평가위원 명단 검토
12월		공문 작성 및 발송	- 당해년도 추진실적 및 익년도 시행계획 자료 제출 요청 (사무국을 통한 공문 발송)



1.2. 사전협의 운영 지원

❖ 제도 개요

- 사전협의를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바탕으로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정책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성과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전협의제가 활용되고 있다.
 - 2021년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법 제9조의2 신설, '21.11.30.)을 통해 사전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2년 12월 1일부터 사전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이행계획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층평가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3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회람을 거쳐 최종 2개 과제에 대해 선정 및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이행계획서 및 전문가 검토의견을 본위원회에 상정하였다.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 사전협의 대상 과제 발굴을 위해 점검·평가 대상 핵심과제 중 심층 평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3개의 사전협의 대상 과제를 발굴하였다.
- 부처 회람 결과, 사업 개편에 따라 삶의 질 계획 방향과 달라진 과제를 제외한 2개의 사전협의 대상과제를 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 승인 및 해당 부처 통보가 이루어졌다.
-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농어촌 지역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환경부)’,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국토부)’이며, 부처에서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농어촌 지역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필요성)** 도서 및 연안 지역 중심으로 폐기물 시설 설치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수요에 맞춘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부담, 농어촌 지역 관계 법령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협의 대상 과제로 선정되었다.
 - 사업 개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대를 통한 생활환경보호 및 보건 위생 향상 도모
 - 사업기간/예산: '95년~계속 / '24년 국비 3,570백만 원(12개소)
 - 정책수행도 점수(점): ('22) 86.0, ('23) 85.3, ('24) 79
- **(협의 방향)** 국고 지원 한도 상향을 통한 농어촌 재정지원 확대 및 신규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고려한 제도 개선 사항 검토를 사전협의의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지원하였다.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국고 지원 한도 상향(15→23억 원)을 통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사항 및 개선여부 검토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 **(필요성)** 농어촌 지역 고령자 인구 대비 사업 규모가 작아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위험도 분석 기반의 마을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전협의 대상 과제로 선정되었다.
 - 사업 개요: 농어촌 주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농어촌 고령 보행자·운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 사업기간/예산: 계속 / '24년 국비 305백만 원
 - 정책수행도 점수(점): ('22) 79.3, ('23) 88.7, ('24) 78
- **(협의 방향)** 대상마을 선정 시 수요 및 사고 발생 현황, 교통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규모 및 예산 확대를 통한 교보재 및 교육 자료 개선, 강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교육 질 제고를 사전협의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지원하였다.
 - 기존 지표인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고령자 맞춤형 교육과 교통안전용품 자원실적'으로 개선하여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집중도 향상
 - 농어촌 고령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고려하여 고위험 농어촌 마을에 집중된 교통안전 관리 추진
 - 고령자의 인지·신체적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협업하여 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강사 양성 추진

1.3. 농어촌 영향평가

❖ 제도 개요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는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5조에 따라 정부 부처의 계획·정책·사업 등이 농어촌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조정 제도이다.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또는 사업 추진 시 교통 접근성 및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전달이 열악한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도시 대비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정책·사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자 농어촌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정책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 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평가의 주제, 방향, 절차, 대상 정책 등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25년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는 총 2개로 ‘도·농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과 ‘식품사막 최소화’가 선정되었다.
 - ‘도·농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 과제는 고령인구 증가, 독거노인 비율 확대, 노후화된 주택 등 농어촌 고령자 주거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 안전,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 ‘식품사막 최소화’ 과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상점 감소와 이동 제약 등으로 주민의 일상적 식품 접근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식품 접근권 보안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에 따라 선정되었다. 본 영향평가는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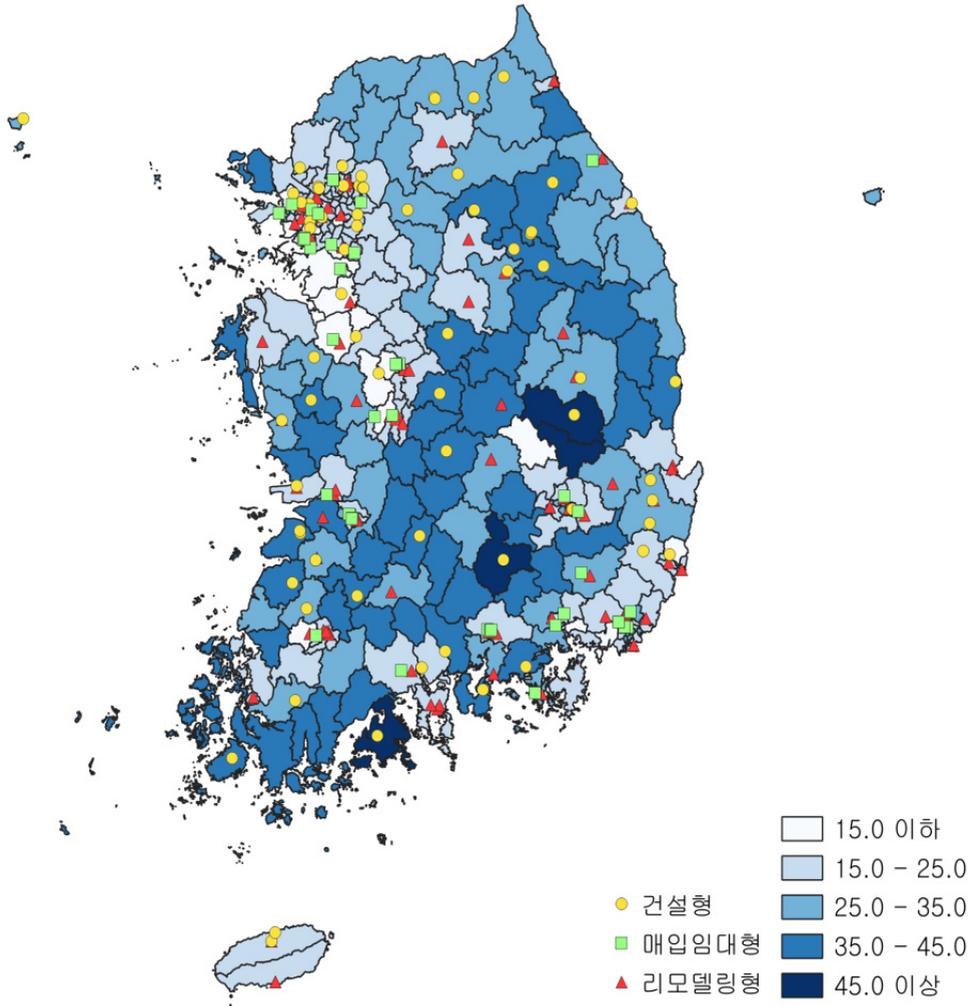


1.3.1. 도·농간 고령자 주거 복지 격차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현황

-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이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건설형, 매입임대형, 리모델링형으로 공급되며, 2024년부터 공급 확대를 위한 기존 건설형 외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모 등 공급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 20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해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누적 84개소 8,848호가 선정되었다. 2024년까지 총 35개소 (4,108호)*가 완공 및 입주 완료하였다.
 - 권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8개소, 강원 5개소, 경상 7개소, 전라 8개소, 충청 7개소로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 공급 초기 도시(동) 중심이었으나, 2018년 읍, 2020년 면 지역의 공급이 시작되면서 농어촌으로 확대되고 있다.
 - * 전국 35개소 중 도시 지역 14개소, 농어촌 지역 21개소(읍 16개소, 면 5개소) 분포
 - 도시 고령자 10만명당 0.18개소, 농어촌 고령자 10만명당 0.84개소가 공급되어 주거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공급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농어촌은 고령화율과 노후주택 비중이 높아 정책 필요성이 크지만, 주거환경 개선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은 고령자복지주택이 단순 주택공급을 넘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 이에 현재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과 같은 맞춤형 공공임대 정책이 농어촌의 특수한 주거 수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시군구별 고령화율 및 고령자복지주택 선정 지역 〉



주: 범례는 고령자복지주택의 각 유형과 시군구별 고령화율(%)을 의미함.
 자료: 고령자복지주택 설치 자료(국토교통부) 및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

□ 농어촌 맥락에서의 목적-수단 정합성 분석

- 농어촌 맥락에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의 정책 목적과 수단간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정책 목적은 초고령사회 대응과 농어촌 주거복지 향상의 측면에서 타당하며, 제 5차 삶의 질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의 방향과도 정합한다. 또한 지역사회 계속거주 (Aging in Place, AIP)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이 도시 입지를 전제로 설계되어 기초생활시설 부족, 교통접근성 제약, 낮은 재정자립도 등 농어촌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입지 적정성 및 수요 타당성 평가항목에서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급 필요성이 높은 농어촌 지자체가 사업 신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재정 투입 대비 성과의 도·농 비교

- 재정 투입 대비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예산 대비 산출 지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소당 평균 사업비는 도시와 농어촌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대당 투입비용과 고령자 인구 대비 공급 밀도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대한 공급 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한 주거비 절감효과는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임대료 절감효과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2.5배가량 높으며, 관리비의 경우 도시지역은 절감효과가 발생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주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40%로 제시하고 있지만, 입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한 임대료는 도·농 지역에 따른 입지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 지역 입주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발생했다.

〈도·농별 입주 전-후 평균 임대료 및 관리비(입주자 설문조사)〉

구분	평균 임대료(만 원)			평균 관리비(만 원)		
	입주 전	입주 후	임대료 절감효과	입주 전	입주 후	관리비 절감효과
도시(n=115)	12.6	5.7	6.9	9.2	6.7	2.5
농어촌(n=199)	8.8	6.0	2.8	9.7	9.9	-0.2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도·농별 고령자복지주택 평균 임대료(입주 공고문)〉

구분	평균 공급 면적(m ²)	평균 임대료(원)	
		가군(수급자)	나군(일반)
도시	25	47,693	107,703
농어촌	25	45,230	95,191
	읍	44,581	93,917
	면	47,048	98,758

주 1)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열람 가능한 각 단지의 최신 모집 공고문을 확인함.

주 2) 가군(수급자) 기준 임대료는 타 복지정책의 지원 효과이므로 나군(일반) 기준 임대료를 중심으로 비교함.

- 입주 전후 만족도 분석에서는 농어촌 입주자의 만족도 개선 폭이 전반적으로 도시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응급상황 대응, 주거환경 쾌적성, 냉난방 설비 등 주거환경 관련 항목에서 개선이 두드러졌다.
- 농어촌 만족도 변화는 컸지만, 입주 후 만족도 수준은 여전히 도시 입주자보다 낮아 농어촌 인프라 부족의 한계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별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입주 전후 항목별 만족도 비교 〉

(단위: 점)

만족도 항목	구분	입주 전	입주 후
의료시설 접근성	도시	3.83	4.03
	농어촌	3.07	3.66
복지·여가시설 접근성	도시	3.66	4.49
	농어촌	3.05	4.28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도시	3.70	4.18
	농어촌	3.16	3.63
교통시설 접근성	도시	3.81	4.18
	농어촌	3.15	3.69
주거비용 부담정도	도시	3.64	4.26
	농어촌	3.11	4.09
주변환경 쾌적성	도시	3.42	4.35
	농어촌	3.19	4.22
주거 내부 안전성	도시	3.47	4.40
	농어촌	3.02	4.42
통풍 및 채광	도시	3.57	4.41
	농어촌	3.24	4.22
냉난방 상태	도시	3.40	4.40
	농어촌	3.07	4.28
응급상황 대응 신속성	도시	3.51	4.30
	농어촌	2.73	4.37
전반적 만족도	도시	3.60	4.37
	농어촌	3.21	4.28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농어촌 현장 적용 실태: 현장 모니터링 주요 결과

- 농어촌 고령자복지주택의 종합적인 운영실태와 현장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고령자복지주택 7곳을 선정하고 직접 방문하여 시설 관리자, 복지 실무 담당자, 지자체 관계자 등 관련자에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 고령자복지주택의 무장애 설계 등 주거 자체 만족도는 높지만, 설계 및 운영 전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과 도농 격차가 확인되었다.
 - 운영 및 관리에서는 하자 처리나 공용비 부담 등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대응이 지연되고 주차 부족과 최소 인력 운영, 야간 대응 공백, 소규모 단지의 높은 관리비 부담이 확인되었다.
 - 복지서비스는 지역 자원 및 인력 차이로 도시가 더 다양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일부 농어촌은 강사 수급과 공간 제약으로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전동보행차 보관 및 충전 인프라와 공용공간 부족 문제가 있으며 비상시 대피와 교통 및 의료 접근성이 지속 거주에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제도적으로는 현장 의견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우며 운영비 및 인력 부담이 지자체로 전가되는 한계가 컸다. 더불어 농어촌형 다양한 모델 논의가 있지만 예산 및 사업적 측면으로 단기 도입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고령자 복지주택 내 프로그램실(좌) 및 전동차 임의 주차공간(우) 〉





❖ 농어촌 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부처 간 연계 강화

- 고령자복지주택 정책 효과 개선을 위해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 의료·돌봄을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연계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주거공급)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노인복지, 통합돌봄 등), 농림축산식품부(생활여건개선) 등 부처 간 협력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 현재 제안서 평가기준에는 고령자 복지 관련 정부정책 연계 여부에 따라 가점(5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분절된 현재의 구조에서 사업 제안자에게만 연계 노력을 요구하는 구조이다.
- 초고령자 밀집은 돌봄 필요도를 가증시키므로 고령자복지주택을 주거 중심의 '건물'이 아닌 '주거-복지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하드웨어(건물)와 소프트웨어(복지서비스)가 균형 있게 공급되도록 부처 간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

- 현재의 제안서 평가항목은 도시적 입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 공모 선정 시 도시 지역과 경합이 발생할 경우 구조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불리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또는 평가 항목을 유지하되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농어촌에 불리한 항목인 입지나 수요 규모, 사업비 부담 정도를 배제할 순 없으나, 그 외에도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입지적정성(20점) 항목 평가시 절대적인 인프라 근접성보다는 '대안적 접근 수단 확보 여부'를 보완지표로 함께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수요타당성(30점) 항목 평가시 수요 규모와 함께 '주거 취약성' 또는 '사업 필요성' 평가 지표를 구성하여 주거 취약도가 높아 안전한 주거환경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조정할 수 있다.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 초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가·돌봄 기능 외에 의료·요양 인프라와의 연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추진의지 및 역량 제고와 동시에 돌봄·요양·의료 제공 통합모델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 수정(안) 〉

평가 항목	주요 평가 내용 수정(안)	배점
사업 필요성 (주거 취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제안> 지역 내 고령화율, 무주택고령자 및 노후·불량주택 비율 등 사업 필요성 	15
입지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 (입지특성, 교통접근성, 규모, 일조·소음 등 거주환경 등) ▪ 생활편의시설 및 고령자를 위한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 <추가 제안> 대안적 접근수단 확보 여부(이동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등) 	20
수요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 고령자복지주택 수요 대비 공급 현황 ▪ 향후 지역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한 고령자특화 임대주택 수요 예측치 등 	15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돌봄사업 등 고령자 복지 관련 정부정책 연계 여부 (단, 추가사업비 소요되는 경우 소요재원 조달계획 명기) ▪ <추가 제안> 사회복지시설 내 요양·의료 인프라서비스 제공 계획 	각 +5

주: 수정 제안 내용은 볼드체로 표시.

자료: 기존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저자작성.

-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될 때에도 소득구간 기준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취약계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입주자 선정 기준을 소득구간 기준에 한정하기보다는 지역 내 다양한 취약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기준(장기요양등급자, 단독세대주 고령자 등)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

현행	개정(안)
<p>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p> <p>1.가2)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공급 상황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p> <p>1.가2)----- ----- ----- ----- ----- ----- -----정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p>

자료: 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농어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넓은 생활공간, 저렴한 지가, 취약한 주거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저층 타운하우스형 또는 연립형 등의 다양한 공급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 저층형은 고령자의 긴급대피 안전성을 높이고 엘리베이터 사용에 따른 시설 위험을 줄이며 초고령 밀집 완화와 쾌적한 단지 계획에도 유리하다.
 - 또한, 도농 차이를 고려하여 주거면적 기준을 차등화하고 인프라 접근성 격차를 반영한 입지 기반 임대료 산정 등 농어촌 특성을 활용한 저층저밀도 공급 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권한 및 역량 강화

- 고령자복지주택의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원활한 시설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운영 주체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제 운영 예정자 또는 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복지시설 운영 관점에서 공간 구성, 동선계획, 부대시설 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
 - 특히 고령자 이용 시설의 특성상 보행 보조기 교행, 휠체어 및 전동차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 주차공간, 창고 및 보관 공간, 프로그램실 등 실제 수요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경우, 실수요를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사업자 선정 시기나 절차를 조정하여 설계 초기 단계에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기본설계 완료 전 운영 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설계와 운영의 정합성을 높인다.
- 설계 단계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 이때 요구되는 역량은 주택 건설 추진에 관한 사업 관리 역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돌봄·의료 등의 수요를 파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1.3.2. 식품사막 최소화

❖ 농어촌 식품사막 여건 및 현황

□ 인구·정주 여건 변화에 따른 식품 접근 환경

○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 내 소비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며, 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2024년 기준 농가 인구(약 200만 명), 여가 인구 (8만 4천 명)

○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심지역 대비 인구 밀도가 낮고 소비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민간 유통망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식품사막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73.5%(27,609개)에 식료품 소매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²⁾,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 불가 지역이 전국의 250개 시·군·구의 49.2%(123개 시·군·구)³⁾에 달해 온·오프라인 공급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 이러한 환경은 신체적 취약 계층인 고령층의 생활권 내 필수재 조달 불능에 따른 원거리 이동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정주 기반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직결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 식품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하여 삶의 질 높인다>, 보도자료, 2024. 7. 29.

3) 송진호, <시군구 250곳중 절반 "새벽배송 안됩니다">, 동아일보, 2023. 12. 6.

□ 교통·이동 제약과 식품 접근성 문제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배차 시간은 평균 69.3분에 달해 도시 대비 현저히 긴 대기시간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27.6%가 7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⁴⁾ 신체적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 식품사막 지역 주민이 신선식품 구입을 위해 투입하는 편도 이동 시간은 평균 1시간으로 나타나며,⁵⁾ 도서 지역의 경우에 도선 운항 시간과 기상 상황에 따라 이동권이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으므로 식품 구매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에 더해 건강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내 '고령 단독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⁶⁾, 이들은 자차 운전 불가, 정보 기기 활용 미흡 등으로 인해 온라인 배송 서비스에서도 소외되는 식품 접근성 양극화를 겪고 있다.
 - *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농가 55.8%, 어가 50.9%, 전국 19.2%
 - ** 농가 1인 가구(23만, 23.6%) 2인 가구(56만 3천, 57.8%), 어가 1인 가구(8,900가구, 21.8%), 2인 가구(2만 5천, 61.2%)
 - 특히 고령층 및 차량 미보유 가구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 수준에 따라 식품 구매 가능성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이며 이에 따른 신선식품 구매의 어려움은 라면, 통조림 등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이어져, 영양 불균형 및 만성질환 유발 등 건강권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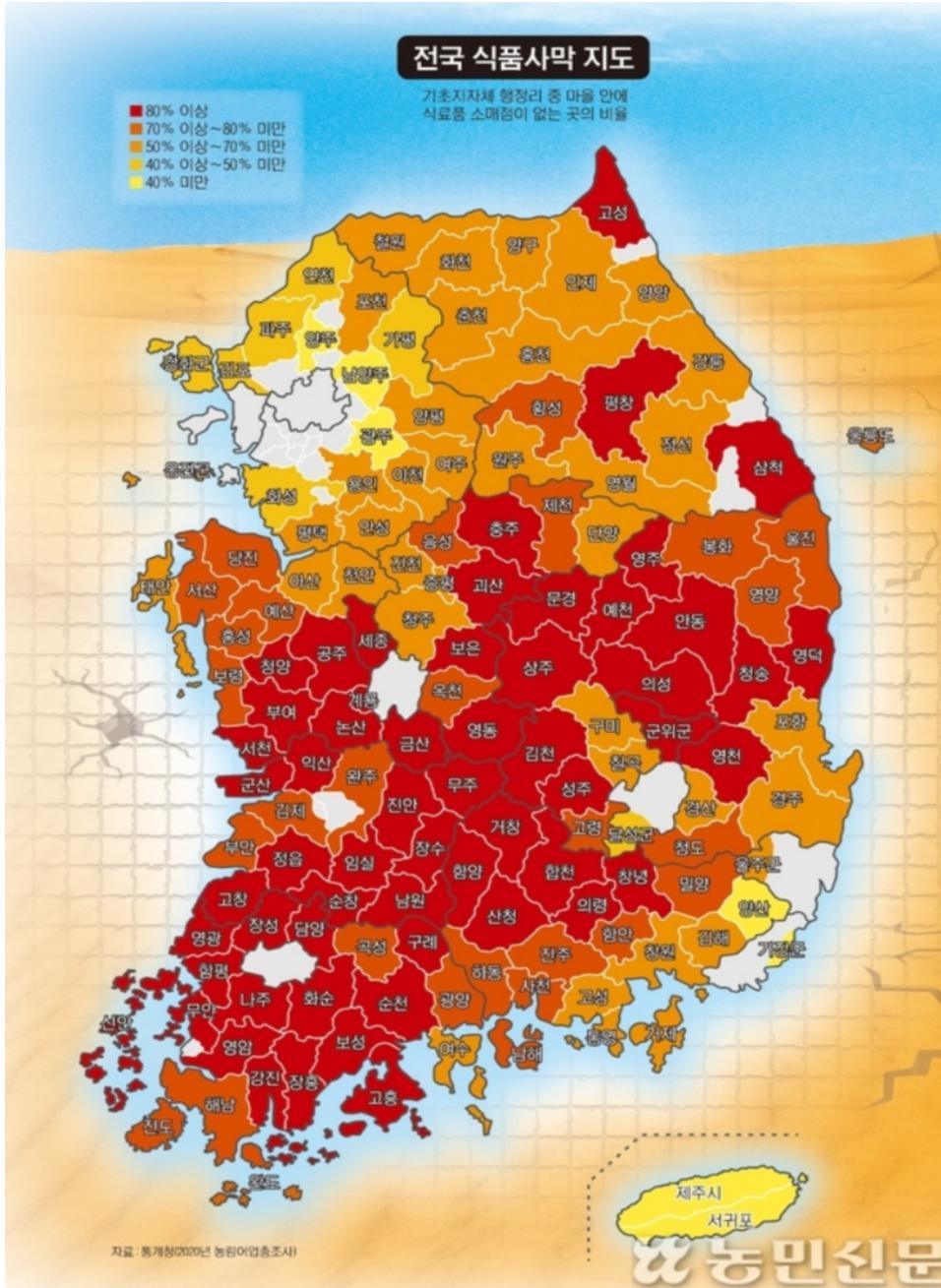
4) 농촌진흥청, 농어촌 대중교통 배차 시간 '평균 69.3분', 70대 이상 이용 많아, 보도자료, 2025. 6. 15.

5) 전북연구원, 도시는 15분 생활권, 교통오지 농촌의 "30분 농촌생활권" 도입 필요, 이슈브리핑, 2025. 3. 27.

6)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2024.12.01. 기준)



〈 전국 식품 사막 지도 〉



자료: 농민신문(2024.05.10.) 「달걀 사려면 차로 1시간 '식품사막'...도시처럼 정보는 일상은 꿈」

□ 식품 공급 모델의 필요성

- 유통 인프라 붕괴와 이동권 제약이 결합된 농어촌의 식품사막화는, 일상적인 식품 구매가 어려워지는 생활 환경 변화로 이어지며 정주 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의 공간적·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 공급 체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 특히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농어촌 특화형 식품 공급 모델’은 취약지역의 식품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식품사막 문제는 식품 접근성 확보라는 공공적 목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식품 공급 공백은 개별 소비자의 선택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와 생활권 조건에서 비롯되는 환경적 제약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식품 접근성은 단순한 소비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의 하나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식품사막 대응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농어촌 생활서비스 체계의 일부로서 공공성과 지속성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 식품사막 관련 정책·사업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마을에 식품사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은 개조트럭을 활용하여 식료품점이 없거나 읍면 소재지의 마트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생필품(가공 식품, 식료품,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비를 활용하여 이동차량, 기자재 등을 보조하고, 시군구, 지역농협 및 사회협동조합 등과 협업하여 유류비, 경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113개 농촌지역 대상 의견조회 후, 9개 시군을 발굴*하여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다.

* 충북 청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장성군, 함평군, 경북 의성군, 강원도 양양군, 충남 당진시, 전북 임실군, 전남 순천시

〈 가가호호 이동장터 사업 유형 〉

사업 역할	주요 내용
농식품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용 이동장터 차량 및 기자재 구입 지원
지자체	- 이동장터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및 보조인력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 이동장터 전담인력 확보 및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이장, 부녀회장 등)	- 이동장터 사업 고지, 마을 방송 안내, 고령층 안전관리, 현장의견 수렴 등
사업 유형	
이동형	- 이동식 판매 차량을 활용하여 배후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고, 집 앞까지 직접 방문하여 판매·배달 서비스 제공
교통 서비스 연계형	-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연계하여 소매점까지 이동 서비스 지원
주문 배달형	- 지자체가 읍·면 소재지 소매점(하나로 마트, 슈퍼 등)과 연계하여 사전 주문을 기반으로 배후마을까지 배송 서비스 제공
민간참여형	- 지역 공동체(여민동락 등) 참여를 통해 민간 중심의 자립적 운영체계 구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09.12.) 「이젠 만나러 갑니다 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발대식 개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시범사업 운영 시·군〉

시범사업 시군	시범사업 기간	협업기관	비고	
1차	충북 청주시	2026.01~2026.02	동청주농협	미원면 주 5일 하루 3개 마을 방문
	전북 완주군	2025.09 ~	고산농협	고산, 동상, 비봉 3개면 38개 마을 매주 1회 30분씩 방문
	전남 장성군	2025.10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원면 버스정류장 600m 이상 떨어진 마을 방문
	전남 함평군	2025.09 ~ 2025.10	나비골농협	해보면 5개 노선 마을별 월 2회 서비스 제공
	경북 의성군	2025.08 ~	새의성농협	점곡면 매주 2회 마을회관 방문
2차	충남 당진시	2025.11~2025.12	4개 농협(합덕, 우강, 정미, 대호지), 하나로마트,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합덕읍-우강면, 대호지면-정미면 격주로 마을당 주 1회 방문
	전남 순천시	2025.11~2025.12	순천농협	송광·외서면 마을 주 5일 순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03.24.) 「21개 부처·청이 머리를 맞대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올린다」,
 농민신문(2025.09.15.) 「농식품부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발대식」
 농민신문(2026.01.11.) 「농촌 누비는 이동장터.. 매주 기다려요」
 순천시청 보도자료(2025.11.25.) 순천시, 「가가호호 마중장터 출발.. 농촌 맞춤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매일신문(2025.12.31.) 「함평군,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본격 운영」
 경향신문(2026..1.19.) 「식품 사막화 막자.. 충북 청주시, 찾아가는 이동장터 시범 운영」

- 어촌의 경우, 2025년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을 기반으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복(어촌복지)장터 및 점빵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육지와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거주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섬의 경우, 저운 탐차를 활용하여 냉장·냉동식품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섬 지역에 방문 판매하는 어복장터를 운영하였다.
 - * 신안군 당사도 노선(당사도 → 대기점도 → 소기점도 → 소악도)
 - 한편, 육지로부터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며 마트가 없는 섬(2개소)*을 대상으로, 무인점빵을 개설하여 식품·생필품 구입을 지원하였다.
 - * 통영시 상노대도(마을회관) 및 옹호도(다목적 창고)
- 어복장터의 경우 총 9회 운영되어 총매출 11,700천 원을 기록하였으며, 회차당 평균 매출은 약 1,300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운영 기간 전반에 걸쳐 주민 이용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이동장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확인되었다.



- 매출 단가가 높은 축산품의 판매 비중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고단가 품목 소비가 전체 매출 규모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어복점빵의 시범운영기간(25년 4분기) 동안 용호도와 상노대도 2개소의 총매출은 1,930,593원을 기록하였다.

* 용호도 1,101,866원, 상노대도 828,727원

- 어복점빵의 주요 매출은 가공식품·음료류 등 간편식 및 기호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용호도 : 가공식품(55.2%) > 음료류(39.1%) > 생필품(3.1%) 순

* 상노대도 : 가공식품(54.5%) > 음료류(41.9%) > 생필품(2.4%) 순

- 컵라면, 스낵류 등 식사 대응 및 간식류의 소비 비중이 높아, 어복점빵이 마을 내 간이 매점이자 식료품 조달의 보조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반면 양곡류, 조미료, 반찬류 및 세제·화장지 등 일반 생활용품의 구매 비중은 매우 낮아, 해당 품목은 여전히 육지 대량 구매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책 개선 방안

□ 정책적 개선 방향

○ 식품사막 대응 정책은 유통 지원이 아닌 생활서비스 접근성 보완 정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식품사막 문제는 소매점 부족이나 유통망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와 교통 취약, 공간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생활권 단절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식품사막 대응은 수익성이나 유통 효율성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최소한의 식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생활서비스 정책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 농촌과 어촌의 생활권 구조 차이를 전제한 정책 수단의 분기 설계가 필요하다.

- 농촌과 어촌은 생활권의 공간 범위, 이동 방식, 생활 인프라 접근성에서 본질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 적인 차이를 보이므로 동일한 정책 수단을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농촌에는 이동장터 중심의 대응이, 어촌에는 이동장터와 무인점빵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합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단 분기가 요구된다.
- 이동장터와 무인점빵은 기존 유통체계를 대체하기보다 생활서비스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두 정책 수단은 상설 점포가 부재한 지역에서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유통 구조를 대체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정책 성과 역시 매출 규모나 경제성보다는 접근성 확보와 이용 지속성, 주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정책 수단 운영 개선 방향

- 이동장터와 무인점빵은 각각 주기성과 항시성이라는 상이한 기능적 특성을 지닌 정책 수단이다.
- 이동장터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장보기 기능과 대면 접점을 제공하는 반면, 무인점빵은 상시 접근 가능한 최소 소비 기반을 제공한다.
 - 두 수단은 상호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생활권 여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공급 방식의 차이는 주민들의 이용 방식과 소비 행태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 이동장터는 방문 일정에 맞춘 계획적 소비가 중심이 되는 반면, 무인점빵은 소액·다빈도의 즉시 소비가 주를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
 - 이러한 이용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책 성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다.
- 식품사막 대응 정책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 고령층은 이동성과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있어 일반적인 유통·결제 방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따라 결제 방식의 단순화, 이용 안내 강화 등 고령자 친화적 설계가 정책 수단 운영 과정에서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지속적 유지 관리 개선 방향

- 식품사막 대응 정책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일정 수준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운영 중단이나 불연속성은 수요 부족이 아닌 행정적·관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최소한의 운영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지역공동체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공동체는 수요 파악과 이용 안내 등 현장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재정 지원과 행정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 역할 분담이 불명확할 경우 운영 부담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어 사업 지속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 이동장터와 무인점빵은 단년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서비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 식품 접근성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이므로 단년 단위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 주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 역시 안정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



2. 조사·연구

2.1. 202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2.2. 2025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2.1. 202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 제도 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의미하며,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 관점에서 4대 부문 19개 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도·농 간 생활 격차 완화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하였고,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11)8대부문31개 항목→(‘13)9대부문32개 항목→(‘15)7대부문17개 항목→(‘21)4대부문19개 항목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 및 목표치 등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명시한다.
 -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의 4대 부문 19개 항목을 제시하고, 매년 이행실태를 측정한다.
 - 관계 부처·청 담당자 및 부문별 전문가, 농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민·관 및 범부처 협의체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를 운영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는 공공서비스 항목 및 목표치 설정, 달성 정도 점검·평가, 제도 개선 등 운용 전반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기구이다.
- 제4차 기본계획(‘20-’24) 수립 시 항목 신설 및 목표치 설정, 분석 방법 변경 등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개편하였다.
 -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 및 국가적 생활SOC 확충 기조에 따라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폐기물 항목 등 3개 항목을 신설하였다.
 -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 기준에 착안해 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도서관, 초·중등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6개 항목에 대해 접근성 분석 방식을 도입하여 접근시간과 목표치를 달성한 주민 거주지 비율을 평가한다.



❖ 2024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내용

- 제4차 기본계획('20-'24) 수립 시 개편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의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중기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139개 농어촌지역 시·군에 대해 달성 정도를 측정한다.
 - * 중기 목표치는 제4차 기본계획('20-'24) 기간에 걸쳐 달성해야 하는 최종 목표치를 의미
- 2024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공식통계 자료(11개)와 부처 협조자료(9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자료(5개)와 민간업체 생산자료(1개)를 활용한다.
 - 자료 수집 시점(2024년 9월~12월 중) 기준 구득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4대 부문 19개 항목 중 2020년 기준 11개 항목 달성에서 2024년 기준 15개 항목 달성으로 개선되었다.
 -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부문의 모든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전체 19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목표치 달성도가 향상되었다.
 - * 목표치 달성항목(개): ('20) 11 → ('21) 12 → ('22) 12 → ('23) 14 → ('24) 15
 - 정주여건 부문은 9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하나, 미달성 항목(4개) 중 상수도, 영농·생활폐기물 2개 항목에서 달성도가 개선되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및 자료 〉

부문	항목	세부항목	점검 방법	점검 자료	자료
1. 보건·의료·복지	진료	내과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4대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한 인접 의료기관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데이터	공식 통계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	시·군별 119 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	소방청: 소방서별 119구급대 출동 소요 시간 현황	협조 자료
	영유아 보육·교육	어린이집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교육부: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 현황	공식 통계
		유치원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중등 및 고등교육 기관 주소록	공식 통계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공식 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공식 통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 조사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공식 통계	
2.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초·중학교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교육통계서비스: 초·중학교 주소록	공식 통계
	평생교육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지자체 조사: 비형식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현황	행정 조사
	문화	문화예술 회관 및 지방 문화원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문화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량):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 통계
	도서관	도서관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식 통계
	체육시설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체육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및 체육진흥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	협조 자료



(계속)

부문	항목	세부항목	점검 방법	점검 자료	자료
3. 정주 여건	주택	석면 슬레이트 주택지붕	{('14년부터 '24년까지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 실적)/ '14년 슬레이트 주 택 수}×100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실적-주택 철거 처리 분야	협조 자료
	상수도	-	(시·군별 면 지역 지방 및 광역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 지역 주민등록 인구)×100	환경부: 상수도 통계	공식 통계
	하수도	-	(군 지역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 군 지 역별 인구)×100	환경부: 하수도 통계	공식 통계
	난방	-	(읍부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부 전체 가구 수)×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 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 수 / (읍·면 지역 총 가구 수 -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 자료
	대중교통	-	(도보 15분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법정리 수 / 총 법정 리 수)×100	대중교통 버스노선 정보 (㈜아로정보기술)	민간 기업 자료
			도서 지역 여객선 운항 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실적	협조 자료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처리장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환경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황	협조 자료
		생활폐기물 처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100	지자체 조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설 치된 행정리 수	행정 조사
	방법설비	-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100	지자체 조사: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행정 조사
경찰순찰	-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시간·장소에 대 해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 여부	경찰청: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지역 및 탄력순찰 실시 현황	협조 자료	
소방출동	-	(시·군별 목표시간내 도착 건수 / 총 출동 건수)×100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발생 장소 및 출 동거리	협조 자료	
4. 경제 활동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	시·군별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컨 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① 대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연간) ②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연간)	행정 조사

❖ 202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 결과

- 2024년 기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4대 부문 총 19개 항목 중 목표치 달성 항목 수는 15개이며, 미달성 항목은 4개로 조사되었다.
 - 2023년 대비 달성 항목이 1개(소방출동) 추가되었고, 전년도 수치와 비교 시 13개 항목은 상승, 3개 항목(영유아 보육·교육, 초·중등교육, 경찰순찰)은 하락, 3개 항목(진료, 노인복지, 대중교통)은 유지되었다.

□ 보건의료·복지 부문 (4개 항목)

- 보건의료·복지 부문의 4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 진료과목의 평균 접근 시간이 평균 22.7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18.4분, 외과 21.8분, 소아청소년과 24.8분, 산부인과 25.8분으로, 4개 진료과목 모두 목표치(30분~1시간)를 달성하였다.
 - 당초 세부 진료과목에 따라 목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목표치를 30분~1시간으로 설정하였으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일괄 30분으로 점검하였다.
- 응급의료 항목은 119구급대 현장 도착 소요시간이 평균 11.6분으로 나타나 목표치(30분)를 달성하였고, 전년 대비('23년 12.1분) 0.5분 감소하여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다.
-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평균 접근시간이 9.2분으로 목표치(20분)를 달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0.1분 늘어났다.
- 노인복지 항목은 농어촌 시·군 100%가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목표치(80%)를 달성하였고, 전년의 달성 정도를 유지하였다.



□ 교육·문화 부문 (5개 항목)

- 교육·문화 부문의 5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초·중등교육 항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평균 접근 시간이 7.5분으로 목표치(10분)를 달성하였고, 전년('23년 7.3분)보다 접근시간이 0.2분 늘어 달성 정도가 소폭 하락하였다.
- 평생교육 항목은 평생교육시설(주민자치센터 포함)을 운영하는 읍·면 비율이 85.8%로 목표치(70%)를 충족하였고, 전년 대비('23년 85.6%)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다.
- 문화 항목은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까지의 접근 시간이 평균 23.9분으로 목표치(40분)를 달성하였고, 전년('23년 24.0분)보다 접근시간이 0.1분 줄어들어 달성 정도가 소폭 개선되었다.
- 도서관 항목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까지의 접근 시간이 9.6분으로 목표치(10분)를 달성하였으며, 전년('23년 9.7분)보다 0.1분 감소해 달성 정도가 개선되었다.
- 체육시설 항목은 체육관 및 경기장 등 생활체육시설까지의 평균 접근시간이 15.6분으로 목표치(30분)를 달성하였고, 전년('23년 15.8분)보다 0.2분 단축되어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다.

□ 정주여건 부문 (9개 항목)

- 주택, 하수도, 난방, 방범설비, 소방출동의 5개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의 4개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주택 항목은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수가 2014년 대비 41.6% 감소하여 목표치(23%)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23년 38.4%) 3.2%p 향상되었다.
 - 2015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방식의 변경(전수조사→표본조사)으로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 대한 조사는 가용한 통계자료가 없어 측정이 불가하다.
- 난방 항목은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3.3%로 목표치(68%)를 달성하였고, 전년('23년 72.7%)보다 0.6%p 상승하였다.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 방법설비 항목은 방법설비용 CCTV 설치 행정리 비율이 82.2%로 목표치(60%)를 달성하였고, 전년 대비('23년 75.4%) 6.8%p 향상되었다.
- 하수도 항목은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77.5%로 목표치(76%)를 달성하였고, 전년('23년 76.6%)보다 0.9%p 향상되었다.
- 상수도 항목은 면 지역의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이 83.5%로 목표치(85%)에는 미달하나 전년('23년 82.8%)보다 0.7%p 향상되었다.
- 대중교통 항목은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비율이 89.2%로 목표치(100%)에 미달하였고,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 생활폐기물 항목 중 영농폐기물의 경우 영농폐기물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 비율이 80.9%로 전년('23년 80.7%)보다 0.2%p 향상,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비율이 30.1%로, 전년('23년 26.7%)보다 3.4%p 향상되었으나 모두 목표치(100%)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 경찰순찰 항목은 탄력순찰 실시율이 97.1%로 목표치(100%)에 미달하였고, 대상 지역 확대로 전년('23년 98.2%)보다 1.1%p 하락하였다.
- 소방출동 항목은 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 도착 비율이 73.7%로 목표치(70%)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23년 58.4%) 7.9%p 상승하였다.

□ 경제활동 부문 (1개 항목)

- 경제활동 부문의 1개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은 농어촌 시·군 중 연 1회 이상 취업·창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 비율이 95.0%로 목표치(86%)를 달성하였고, 전년('23년 87.1%)보다 15.3%p 상승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현황('20~'24년) 〉

부문	서비스 항목	목표치	목표치 (분,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 보건 의료·복지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30분 ~1시간	23.3분	22.7분	23.1분	22.7분	22.7분 (-)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분	20.5분	14.6분	13.8분	12.1분	11.6분 (0.5분 ↓)
	영유아 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5.8분	9.0분	9.1분	9.1분	9.2분 (0.1분 ↑)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80%	99.3%	100%	100%	100%	100% (-)
2. 교육 문화	초·중등 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7.5분	7.3분	7.4분	7.3분	7.5분 (0.2분 ↑)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88.2%	79.1%	84.6%	85.6%	85.8% (0.2%p ▲)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24.7분	24.0분	24.1분	24.0분	23.9분 (0.1분 ↓)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10.3분	9.9분	10.0분	9.7분	9.6분 (0.1분 ↓)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18.8분	17.0분	16.6분	15.8분	15.6분 (0.2분 ↓)
3. 정주 여건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다)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23%	7.8%	30.7%	34.8%	38.4%	41.6% (3.2%p ▲)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계속)

부문	서비스 항목	목표치	목표치 (분,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 정주 여건	상수도	면지역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85%	77.0%	80.6%	81.6%	82.8%	83.5% (0.7%p▲)
	하수도	군지역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76%	73.3%	74.6%	75.6%	76.6%	77.5% (0.9%p▲)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68%	68.1%	69.4%	70.0%	72.7%	73.3% (0.6%p▲)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기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선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행된다.	100%	87.1%	87.3%	89.1%	89.2%	89.2% (-)
	생활폐기물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영농) 100%	66.4%	75.2%	76.9%	80.7%	80.9% (0.2%p▲)
			(생활) 100%	16.7%	18.8%	20.6%	26.7%	30.1% (3.4%p▲)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60%	64.9%	71.3%	75.9%	75.4%	82.2% (6.8%p▲)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100%	62.9%	90.8%	95.4%	98.2%	97.1% (1.1%p▽)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72.1%	65.0%	69.1%	58.4%	73.7% (15.3%p▲)	
4. 경제 활동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86%	65.5%	68.8%	77.5%	87.1%	95.0% (7.9%p▲)

주 1) 음영 표시는 각 연도 미달성 항목임.

2) 접근성 항목에서 ↑ 표시는 전년보다 소요시간이 늘어난 경우, ↓ 표시는 소요시간이 줄어든 경우임.

3) 일반 항목에서 ▲ 표시는 전년보다 달성률이 향상된 경우, ▽ 표시는 달성률이 하락한 경우임.



❖ 익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 추진 준비

□ 자료 협조 요청 및 구축

- 익년도 상반기에 수행할 2025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위한 부처 간 협조자료 요청목록과 지자체 대상 행정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사무국과 협의 거친 후 사무국을 통해 부처 및 지자체에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 공식통계 17개, 중앙행정기관 협조자료 10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자료 2개를 활용하여 2025년 농어촌서비스기준항목 자료를 구축하였다.
 - 통계자료의 시점은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 구득이 가능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 자료를 사용한다.

〈 2025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 추진 절차 〉

추진 시기	업무	업무 세부 내용
1~2월	공식통계 구축 항목 이행실태 분석, 부처 및 행정조사 자료 가공 및 점검자료 구축	기 구축된 공식통계 활용 항목에 대해 이행실태 분석, 각 항목의 점검방법에 따라 데이터 가공 및 점검자료 구축
3~4월	부처 및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점검항목의 이상치 확인 및 이행실태 분석	이상치에 대하여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수치 확인, 최종적으로 확인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행실태 분석
5~6월	위원회 안건 작성 및 위원회 개최 지원	이행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안건 작성 및 위원회 결과 보고
7~8월	보고서 작성 및 발간	이행실태 결과에 따른 각 항목 보고서 내용 작성, 위원회 결과 보고 후 보고서 최종안 확정 및 발간
9월	익년도 점검 업무 추진 준비	공문 발송 준비
10월		행정구역 현황 자료 구축
11월		공문 작성 및 발송
12월		공식통계 구축
		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부처 간 협조자료 요청목록 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현황 자료(전년도.12.31.기준) 입력
		부처 및 지자체에 1월 초까지 제출 요청(농식품부 발송)
		가. 접근성 항목-진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영유아 보육, 노인복지,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문화기반시설), 도서관 나. 일반 항목 - 고용서비스(시설), 상수도, 하수도, 생활서비스, 식료품

주: 제시한 업무 절차의 추진 시기는 매년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2. 2025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 개요

-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 2025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및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별(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였다.

❖ 주요 추진 내용

□ 조사 개요

-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17개 특·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방법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3,500명이며, 그 중 도시(동부) 지역 주민 응답자는 1,000명, 농어촌(읍·면부) 지역 주민 응답자는 2,500명이다.
- 정주 만족도 조사의 일관성을 위해 주요 조사 문항과 틀은 유지하되, 질문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이슈를 반영하여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 * 신규 문항: (전반적인 삶의 질) 나의 삶의 가치 인식, 주관적 신체건강 인식, 주관적 정신건강 인식, 요즘 우울 정도, (거주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 거주지역에서의 만족감, 거주지역에서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소속감 및 공동체에 대한 인식) 거주지역 주민 신뢰도, 이웃과의 관계



- 만족도를 묻는 각 항목은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였고,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존과 동일한 측정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삶의 질 4대 전략 분야 설문에 '모름' 선택지를 신설하여, 무리한 응답에 따른 데이터 왜곡을 방지하고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2025년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

구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전반적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 나의 삶의 가치 인식 • 주관적 신체 건강 인식 • 주관적 정신 건강 인식 • 요즘 우울 정도
	거주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역에서의 만족감 • 거주지역에서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 마을 발전 전망 • 시·군 발전 전망
	소속감 및 공동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속감 • 거주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 거주지역 이웃에 대한 신뢰도 • 이웃과의 관계 • 이웃간 도움 •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전략별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전략: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대 전략별 정책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별 정책 중요도 	
이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 동안 주요 활동반경 • 이주 의향 •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 및 시기 •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 	
농어촌 관련 사회·정책적 이슈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인식 •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인식 • 농어촌 관계인구 및 활동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에 인식 	

□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결과

-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나의 삶의 가치 인식’, ‘주관적 신체건강 인식’, ‘주관적 정신건강 인식’, ‘요즘 우울 정도’ 항목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 이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7)
- 도시지역 대비 농어촌지역의 점수가 높은 , ‘나의 삶의 가치 인식’, ‘주관적 신체건강 인식’, ‘주관적 정신건강 인식’ 항목은 도·농 간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점수 격차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 삶의 질 변화〉

(단위: 점)

구분		2021	2022	2023	2024	문항개편	2025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도시 지역	-	5.7	6.0	6.0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6.1
	농어촌 지역	-	6.2	6.6	6.5		6.6
	도·농 차이	-	0.5	0.6	0.6		0.5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도시 지역	-	5.7	5.8	6.0	나의 삶의 가치 인식	6.5
	농어촌 지역	-	6.1	6.3	6.3		6.7
	도·농 차이	-	0.4	0.5	0.3		0.2
주관적 건강	도시 지역	6.3	5.9	6.0	5.9	주관적 신체건강 인식	6.2
	농어촌 지역	6.5	6.3	6.4	6.5		6.4
	도·농 차이	0.2	0.4	0.4	0.6		0.2
어제의 우울 정도	도시 지역	-	4.5	4.4	4.1	요즘 우울 정도	4.3
	농어촌 지역	-	3.9	4.0	3.3		3.9
	도·농 차이	-	-0.6	-0.4	-0.8		-0.4
전체 평균	도시 지역	-	5.5	5.6	5.6	전체 평균	6.0
	농어촌 지역	-	5.7	5.9	5.8		6.1
	도·농 차이	-	0.2	0.3	0.2		0.1

주: 2021~2024년 ‘어제의 우울 정도’ 문항은 역 코딩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함.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7) ‘주관적 건강인식’ 문항을 2025년 조사부터 ‘주관적 신체 건강 인식’, ‘주관적 정신 건강 인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거주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 농어촌 주민이 거주지역에서의 만족감은 높으나, 지역 발전 전망(마을/시·군 발전 전망)에서는 도시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거주지역에서의 만족감’과 ‘거주지역에서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도시 지역 주민보다 각각 0.1점 높게 나타났다.
- 반면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에서는 도시 지역 주민의 점수가 농어촌 주민보다 각각 0.3점 더 높아,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시 주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거주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변화 〉

(단위: 점)

구분		2021	2022	2023	2024	문항개편	2025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도시 지역	6.4	6.0	6.2	6.3	거주지역에서 만족감	6.5
	농어촌 지역	6.7	6.3	6.5	6.6		6.6
	도·농 차이	0.3	0.3	0.3	0.3		0.1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도시 지역	-	-	-	6.0	거주지역에서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6.4
	농어촌 지역	-	-	-	6.3		6.5
	도·농 차이	-	-	-	0.4		0.1
마을 발전 전망	도시 지역	6.8	6.8	6.3	6.4	마을 발전 전망	6.4
	농어촌 지역	6.5	6.5	6.1	6.3		6.1
	도·농 차이	-0.3	-0.3	-0.2	-0.1		-0.3
시·군 발전 전망	도시 지역	6.9	6.9	6.4	6.5	시·군 발전 전망	6.5
	농어촌 지역	6.6	6.6	6.3	6.4		6.2
	도·농 차이	-0.3	-0.3	-0.1	-0.1		-0.3
전체 평균	도시 지역	6.7	6.6	6.3	6.3	전체 평균	6.5
	농어촌 지역	6.6	6.5	6.3	6.4		6.3
	도·농 차이	-0.1	-0.1	0.0	-0.2		-0.2

주 1) ‘거주지역에서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문항은 2024년 신규 문항임.
 2) 도시 및 농어촌지역 점수와 도·농 간 차이는 모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3) 도·농 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4) 2025년 만족도 점수의 도·농 간 비교 시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문항의 t값은 $p < 0.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 소속감 및 공동체에 대한 인식에서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 농어촌의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7개 문항 모두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가 도시 지역 주민보다 높았으며, 특히 '이웃 간 도움' 항목에서 도농 간 차이가 1.0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소속감 및 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 〉

(단위: 점)

구분		2021	2022	2023	2024	문항개편	2025
지역 소속감	도시	5.7	5.4	5.5	5.6	지역 소속감	5.8
	농어촌	6.1	5.9	6.1	6.2		6.3
	도·농 차이	0.4	0.5	0.6	0.6		0.5
거주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도시	5.6	5.8	5.8	5.7	거주지역 정책신뢰도	5.9
	농어촌	6.0	5.8	6.0	6.0		6.2
	도·농 차이	0.4	0.0	0.2	0.3		0.3
-						거주지역 주민 신뢰도	5.9
-							6.5
-							0.6
이웃 관계	도시	5.8	5.7	5.8	5.9	이웃과의 관계	6.2
	농어촌	6.4	6.3	6.4	6.5		6.7
	도·농 차이	0.6	0.6	0.6	0.6		0.5
이웃 간 도움	도시	-			5.2	이웃 간 도움	5.5
	농어촌				6.3		6.5
	도·농 차이				1.0		1.0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도시	-	4.2	4.3	4.3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4.2
	농어촌		4.5	4.9	5.1		5.1
	도·농 차이		0.3	0.6	0.8		0.9
타지역 주민과 어울림	도시	-	6.1	6.1	6.1	타지역 주민과 어울림	5.7
	농어촌		6.3	6.3	6.2		6.3
	도·농 차이		0.2	0.2	0.1		0.6
전체 평균	도시 지역	5.7	5.4	5.5	5.5	전체평균	5.6
	농어촌 지역	6.2	5.8	5.9	6.1		6.2
	도·농 차이	0.5	0.3	0.4	0.6		0.6

주 1) '거주지역에서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문항은 2024년 신규 문항임.

2) 도시 및 농어촌지역 점수와 도·농 간 차이는 모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3) 도·농 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4) 2025년 만족도 점수의 도·농 간 비교시 '마을 발전 전망', '사·군 발전 전망' 문항의 t값은 $p < 0.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전략별 만족도 결과

- 4대 전략 전반에서 도시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농어촌지역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보건·복지 전략의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도·농 간 만족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농어촌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보다 보건·복지 전략은 1.3점, 교육·문화 전략은 0.7점, 정주기반 전략은 0.6점, 경제·일자리 전략은 0.2점 높았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

(단위: 점)

전략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도·농 간 차이 (농어촌지역-도시지역)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보건·복지	6.8	7.3	5.4	6.0	-1.4	-1.3
교육·문화	6.3	6.8	5.4	6.1	-1.0	-0.7
정주기반	7.0	7.5	6.6	6.9	-0.5	-0.6
경제·일자리	5.2	5.6	4.8	5.4	-0.4	-0.2
전체 평균	6.3	6.8	5.6	6.1	-0.8	-0.7

주 1) 도시 및 농어촌지역 점수와 도·농 간 차이는 모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도·농 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 중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와 '정주기반'에 관한 전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 4대 전략별 중요도 점수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모두 정책 전략 우선순위는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정주기반, 교육 및 문화, 경제·일자리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정책 중요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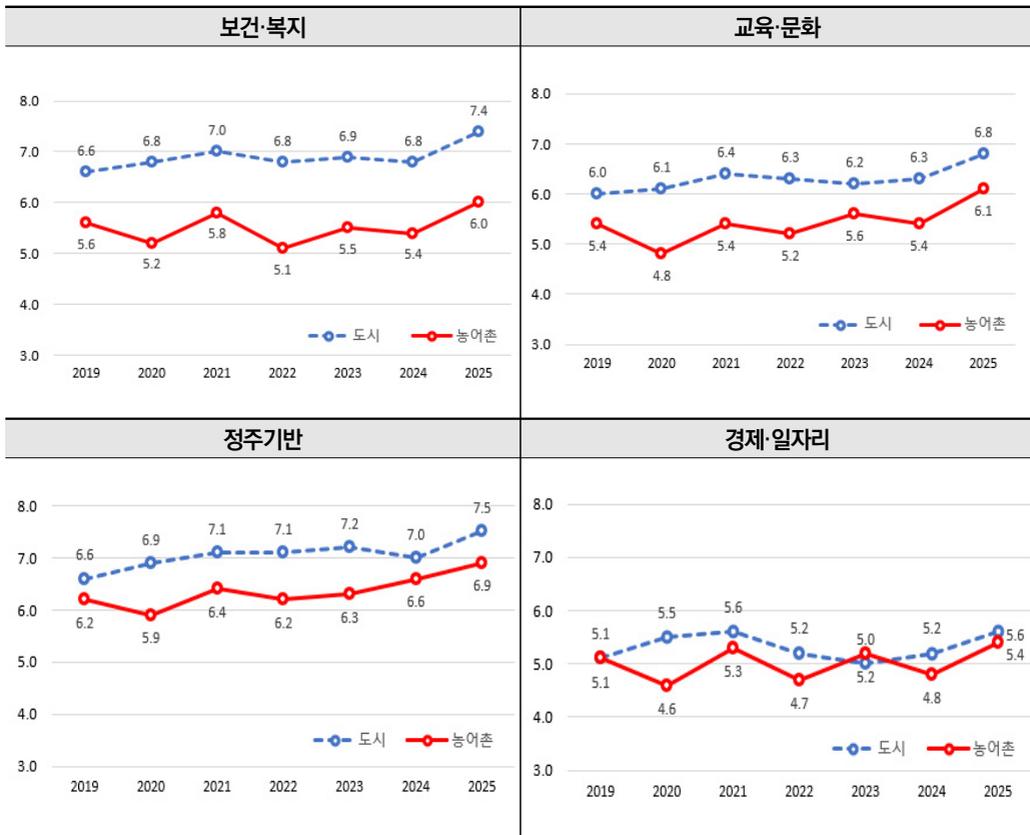
(단위: 점)

전략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의료, 돌봄, 보육·육아, 사회안전망)	7.1	7.0
교육 및 문화 (교육, 평생교육, 문화·여가)	6.9	6.8
정주기반 (교통, 주거환경, 생활 인프라, 환경·경관)	7.1	7.0
경제·일자리 (소득기반, 관광, 취·창업, 여성·다문화 일자리)	6.5	6.7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2025).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점수 추이 >

(단위: 점)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 시사점

- 2025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에 있어서 도시 대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도시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나의 삶의 가치 인식’에서 농어촌 지역(6.7점)이 도시 지역(6.5점)보다 0.2점 높게 나타났으며, ‘요즘 우울 정도’에서 농어촌 지역은 3.9점으로 도시 지역(4.3점)보다 0.4점 낮게 나타나, 농어촌 주민의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은 높으나, 지역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도시 주민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에서 도시 주민의 점수가 농어촌 주민보다 각각 0.3점 더 높았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은 전년 대비 두 항목 모두 0.2점씩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어촌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 4대 전략의 도·농 간 격차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보건·복지 전략은 도·농 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보건·복지 전략은 과거 연도 조사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전략이며, IPA 분석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전략이 최우선 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격차가 컸고(평균 1.7점), 특히 ‘의료 서비스 범위’ 항목의 격차가 1.9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농어촌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의료 서비스 범위 및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분만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주기반 전략에서는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0.6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대중교통’의 경우 도·농 간 격차가 1.5점으로 여전히 크게 나타나, 농어촌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식자재 구입’, ‘다양한 외식 장소’, ‘난방 인프라’가 각 1.3점의 격차를 보이는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불편함이 확연히 드러나는 항목은 여건 개선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Ⅱ.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 보건·복지 전략과 교육·문화 전략을 함께 살펴볼 때, ‘분만 의료 서비스’,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출산 및 문화생활 영위 여건에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교육·문화 전략의 경우 도·농 간 격차가 전년 1.0점에서 0.7점으로 0.3점 감소하였으며, 특히 문화·여가 시설과 프로그램의 격차가 전년 1.3점에서 0.8점으로 개선되어 농어촌 지역의 문화 인프라가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

❖ 개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은 범부처 차원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동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2015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 2025년 우수사례집 ‘미래를 만드는 농어촌,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는 제5차 기본계획의 주요 키워드인 창업, 생활인구(관계인구), 문화·교육·복지 등을 중심으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도한 주민·민간·지자체의 17개 현장 사례를 수록하였다.
 - 신규 우수사례 14건과 2020년도 사례집에 수록하였던 우수사례 중 현재까지 활동 또는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 3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추적·조사하였다.



❖ 주요 내용

□ (생활인구·관계인구) 농어촌과 친구하기

- ‘관계 여행’으로 확장해가는 강화 애정자들의 유니버스 ‘**협동조합 청풍**’
 -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 (키워드) 관계인구, 커뮤니티 여행, 문화적 매개, 로컬 브랜딩, 청년 협동조합
 - (주요내용) 강화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 청풍은 ‘강화 유니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소비하는 기존의 관광 문화를 넘어, 방문객들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며 지역의 작은 상점 및 주민들과 직접 교류하며 깊은 관계를 맺는 ‘관계 여행’ 프로그램인 ‘잠시섬’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잠시섬 크루’ 제도를 통해 청풍과 지역에 애정을 품은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느슨하지만 유연한 조직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일본 시부야대학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관의 통합’을 꿈꾸는 실험을 확대해 나가는 등 더 깊고 넓은 청풍만의 유니버스를 구축해가고 있다.
-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도시 청년들의 시골 라이프, ‘**청년이그린협동조합**’
 -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 (키워드) 친환경 농사, 복합문화공간 달두개학교, 귀농·귀촌 청년 플랫폼, 관계인구
 - (주요내용)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은 ‘지속 가능한 농촌, 청년이 있는 농촌, 즐겁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시 청년들과 지역민이 함께 설립한 공동체이다. 이들은 친환경 농사와 농산물 판매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마을 내 폐교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 ‘달두개학교’를 운영하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을 청년들의 활기로 채우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외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과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달두개학교를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 확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협동조합 청풍의 잠시섬 프로그램(左)과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의 달두개학교 동아리 활동(右) 〉



□ (귀농·귀촌) 살고 싶은 농어촌

- 육아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로 성장하는 ‘다로리인’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 (키워드) 집단 귀촌, 육아공동체, 방과후 활동, 사회적기업
 - (주요내용) (주)다로리인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공통된 마음으로 뜻을 모은 일곱 가구의 젊은 부부들이 청도군 다로리 마을로 집단 귀촌하며 설립한 공동체이다. 이들은 마을 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여 로컬 카페이자 주민 거점 공간인 ‘카페 다로리’를 조성하였으며, 이곳을 통해 원주민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맞춤형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마을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교 ‘온마을배움터’를 운영하며 마을 중심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다. 다로리인의 방과후 돌봄 모델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운영 등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청년 정책 불모지에서 전국 1위로, ‘플래닛 완주’가 만든 완주군의 변화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고산면, 이서면
 - (키워드) 청년 플랫폼, 플래닛 완주, 청년 정주여건, 지역 맞춤형 접근
 - (주요내용) 플래닛 완주는 청년들의 삶과 성장,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기 위해 완주군 내 주요 거점 세 곳에 조성된 맞춤형 청년 플랫폼이다. 대학생 대상의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취업 멘토링과 소통 공간인 '완충지대', 귀농·귀촌 청년의 정착과 마을 자원 연결을 돕는 '청춘 방앗간', 혁신도시 청년들을 위한 문화·여가 중심의 '이서나루' 등 각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와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공간지기' 제도와 참여자 중심의 자율적 운영 방식은 플랫폼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마을 사랑방이자 지역공동체의 허브로 자리 잡는 원동력이 되었다.

○ 도시 청년들의 시골 정착 실험, '어찌다로컬'

- (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 (키워드) 청년 창업, 로컬 정착, 지역 활성화
- (주요내용) 어찌다로컬은 행정안전부의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청양에 정착한 도시 청년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콘텐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로컬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특산물인 고추를 모티브로 한 '청양 고추빵' 개발과 브랜드 매장 '찰리와 고추빵 공장' 운영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각화했으며, '소도시 탐험대'라는 투어 브랜드를 통해 시골살이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500여 명의 누적 참가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단순한 창업을 넘어 지역 내 청년 창업가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외지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정서적으로 융화되고 자생할 수 있는 건강한 로컬 커뮤니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다로리인의 온마을배움터 활동(左)과 어찌다로컬의 로컬 투어프로그램 활동(右) >





□ (농촌관광) 오감만족 농어촌 여행

○ 청년들의 연대가 지역의 미래가 되다, '와우미탄'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 (키워드) 농촌관광, 환경보전, 협동조합, 청년 네트워크, 지역관광
- (주요내용) 와우미탄은 인구 급감으로 소외된 미탄면에서 청년 사업가들이 지역의 천혜 자원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결성한 공동체로, 이들은 개별 사업체로 흩어져 있던 청년 농업인과 관광업 종사자들을 '느슨한 연결'로 묶어 어름치 마을의 생태 체험, 토종다래 가공, 산양삼 체험 등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연합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관광의 별 특별상 수상 및 '농촌 크리에이티브' 사업 선정 등을 통해 대외적인 경쟁력을 입증하였으며, 디지털 관광 주민증 도입과 청년 활동가 발굴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환경 보호 중심의 ESG 여행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 하동다움을 찾는 여정에 놀루와! '놀루와 협동조합'

-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 (키워드) 지역관광,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이장학교, 마을협력가
- (주요내용) 놀루와 협동조합은 공직 출신의 대표와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하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설립한 주민공정여행사다. '마을이 여행지가 되려면 건강한 공동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섬진강 달마중'과 하동형 관계 숙소인 '다숙(茶宿)' 등 하동의 역사·생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마을협력가'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을 마을에 파견하고, '마을이장학교'를 통해 주민 리더를 양성하는 등 지역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평사리 '논두렁 축구대회'와 같은 주민 화합 행사를 통해 관계인구를 창출하고 관광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상생 구조를 구축하여, '한국관광의 별'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농촌지역 활성화의 선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마을의 미래를 그려가는 주민공동체, '하추리산촌마을'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 (키워드) 주민공동체, 마을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 (주요내용) 하추리산촌마을은 가난과 소외를 겪던 산골 마을에서 주민 주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인제군의 대표 농촌 관광지로 거듭난 사례이다. 2006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으로 공동체의 비전을 수립하고 역량 강화 교육에 집중하며 마을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의 역사적 산물인 잡곡을 ‘도리깨잡곡’으로 브랜드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복합문화공간인 ‘카페 하추리’를 통해 마을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여행 프로그램과 도리깨 축제를 개최하여 연간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있다. 하추리산촌마을은 마을 수익을 주민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 와우미탄의 관광프로그램(左)과 놀루와 협동조합의 다숙(茶宿)(右) 〉



□ (문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농어촌

- 지역의 소멸해가는 가치를 기록하고 나누는 ‘복살롱이마고 제주아카이브센터’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 (키워드) 문화자원, 로컬브랜드, 농촌 고령자 구술기록, 지역아카이빙
 - (주요내용) 복살롱이마고는 급격한 개발과 고령화로 사라져가는 제주의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문화공간이자 아카이빙 거점이다.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을 넘어 주민 스스로가 기록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들이 카메라로 마을의 변화를 기록한 ‘제주, 마을의 기억과 풍경’, 마을 어르신 10인의 생애를 담은 ‘어르신 자서전’, 시와 그림으로 4.3의 아픔을 승화시킨 ‘증언 시그림책’ 제작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 마을 탐방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고향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고, 오일장의 향토 자원을 발굴하는 등 주민들에게는 자존감 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문화 자산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책으로 엮어내는 마을공동체, **‘여우네도서관’**

-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 (키워드) 작은도서관, 어린이돌봄, 교육, 공동체
- (주요내용) 여우네도서관은 2008년 귀농인과 지역 학부모들이 마을의 유휴 건물을 활용해 설립한 주민 공동 운영 형태의 작은도서관으로, 농촌 지역의 교육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6년째 영유아 독서 진흥 사업인 ‘북스타트’를 주도하며 지역의 독서 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마을 축제 ‘여우네문화제’와 공유경제 모델인 ‘여우네장터’는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어린이 창작 작업실 ‘모야’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 등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여우네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주민 간 협력과 배움을 이끌어내며, 마을 공동체의 핵심 구심점이자 풀뿌리 문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모두를 위한 문화, 모두가 만드는 문화, **‘완주문화재단’**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 (키워드) 무장애 문화향유 프로젝트, 문화생태계, 문화이장, 예술농부, 문화적 접근권
- (주요내용) 완주문화재단은 고령층, 청년, 장애인 등 농촌의 다양한 주민이 문화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예술인이 빈집에 거주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완주 한 달 살기’를 통해 문화 귀촌과 관계인구를 확대하였으며, 주민을 문화 리더로 발굴하는 ‘문화이장’ 제도를 운영하여 마을 곳곳의 세밀한 문화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단한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전북 합창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적 성취를 거두었으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소통하는 ‘무장애 예술축제 서로’를 통해 사회적 벽을 허물고 있다. 또한, 농부의 삶을 예술로 기록하는 ‘예술농부’ 사업을 통해 농촌의 정체성과 지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며, 농촌에서도 누구나 보편적인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북살롱이마고의 어르신 자서전 프로젝트(左)와 여우네도서관의 여우네문화제(右) 〉



□ (교육·복지) 미래를 준비하는 농어촌

- 맹모 '화천' 지교: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화천군 공교육지원사업'**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 (키워드) 전 생애형 교육지원체계, 화천커뮤니티센터, 양육친화주택, 자율형 공립고
 - (주요내용) 화천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아기부터 대학기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전국 최초의 완성형 온종일 돌봄 모델인 '화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AI 기반 '스마트 안심셔틀'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세계 100대 대학 진학 지원금 지급 등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양육친화주택' 건설을 통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접경지대라는 특수성을 살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을 통해 2009년 49.3%에 달했던 외지 전학률을 2020년 20%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 농어촌 수도 해남의 도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여는 농촌의 출산 해법, **'해남군 공공산후조리원'**
 -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 (키워드) 농촌 공공의료, 공공산후조리원, 농어촌 출산환경, 보편적 돌봄
 - (주요내용) 전라남도 해남군은 2015년 전남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원거리 원정 출산과 높은 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농촌 산모들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이용료와 더불어 사회적 배려 계층 및 관내 거주자에게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특히 해남종합병원 내 설치되어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며, 이주민 여성을 조리사 등으로 채용해 다문화 산모를 배려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와 연계한 통합 모자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농촌형 공공의료 성공 모델로 주목받으며 지역 출산율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화천커뮤니티센터 온종일 돌봄 프로젝트(左)와 해남군 공공산후조리원 프로그램(右) 〉



□ (마을공동체) 지속가능한 농어촌 마을

○ 햇빛으로 농사짓는 마을공동체,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 (키워드) 햇빛소득마을,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마을
- (주요내용)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쇠퇴하는 농촌 마을에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에너지 협동조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유희시설과 부지 등 마을 공유자산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 영농 활동 및 공동급식, 행복버스 등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된다.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어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 마을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 배움·기억·밥상에서 피어나는 공동체, **‘봉곡마을’**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키워드) 귀농·귀촌 정착, 주민 주도 공동체, 문화·복지 서비스, 자발적 복지 실현
 - (주요내용) 봉곡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다. 봉곡마을은 연말 대동회와 매월 임원회의를 거치는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행복한 노인학교’라는 이름의 주민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궤적이 담긴 물건들을 ‘학선리 마을박물관’에 보존하고 ‘봉곡마을 기억창고’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식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돌봄을 실천하고, 주민 상호 간의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돌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 마을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 (키워드) 앵커조직, 주민자치(풀뿌리민주주의), 농촌돌봄공동체사업
 - (주요내용)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작은 학교 통폐합 위기에 맞서 죽고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모인 주민들이 학교와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조직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농장인 삼태마을 공유 농장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지는 작물로 공동급식을 운영하며 지역의 먹거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마을음악회와 ‘섬진강마을영화제’를 개최하여 문화생활을 즐기고 주민들이 직접 취재하는 마을신문 ‘안녕?죽곡’을 통해 마을의 서사를 기록하고 공유한다. 또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카페로 재생하여 주민들의 담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배운 제빵 기술로 마을 내 부족한 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이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자립 마을을 준비하는 등 자생적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 함께 먹고 서로 돌보는 행복공동체, **‘석화마을’**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 (키워드) 주민 화합, 공동체 회복, 마을만들기, 공동텃밭, 주민 중심 복지체계
 - (주요내용) 석화마을은 FTA로 인한 포도농가 폐업과 마을 난개발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공동체이다. 이들은 ‘잘 먹고, 서로 챙기며,



즐겁게 함께하는 행복 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짬짬방과 공동급식소인 '오다가다쉼터' 등 마을 내 복지·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공동 텃밭을 운영하며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아살라토와 같은 생소한 악기를 배우거나 짬짬 공예, DIY 공예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주민 전체가 떠나는 마을 여행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나아가 마을 어르신들이 익숙한 곳에서 생을 보낼 수 있도록 공동생활 공간 조성을 구상하는 등 자립적 복지마을을 실현 해가고 있다.

〈 함께마을교육사협의 목요빵집(左)과 석화마을 마을 공동급식(右) 〉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3.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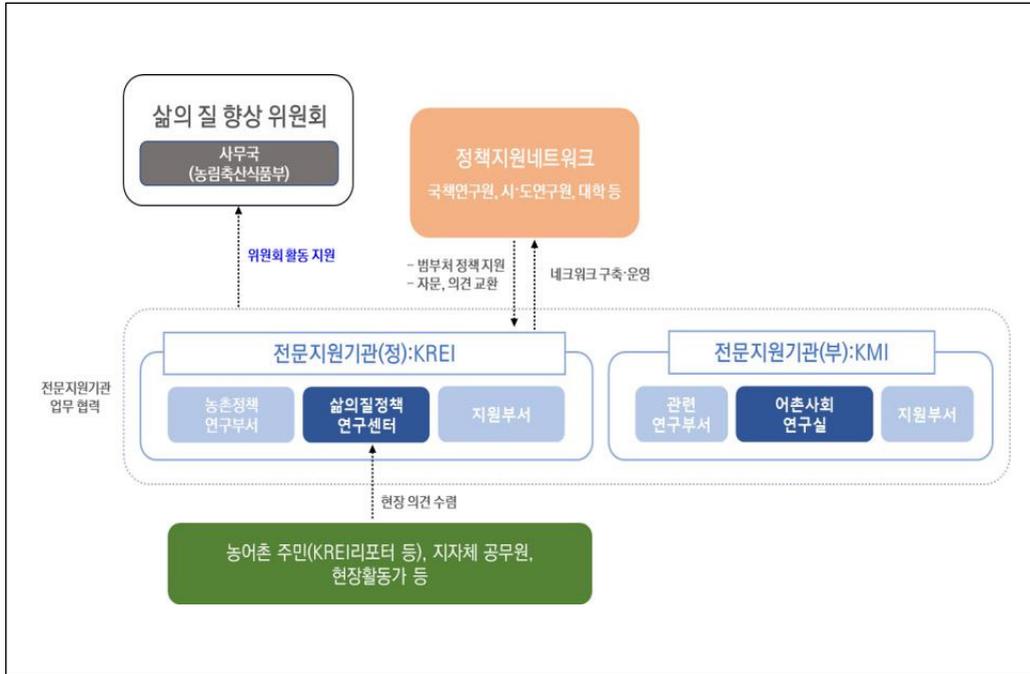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 개요

-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2015년도에 협약을 맺고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분야별 서비스 전달자와 지역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농촌 현장의 여론, 정책 수요, 연구 수요 등을 파악한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는 크게 전문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 네트워크 내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농어촌의 삶의 질 관련 이슈를 발굴한다. 또한 필요시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 2022년까지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는 제 4차 기본계획 종합평가를 위한 포럼을 3회에 걸쳐 추진하였다.
- 한 해 동안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당해 주제와 관련된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토론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 2025년 컨퍼런스는 ‘미래 성장공간, 기회의 땅: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묻다’라는 주제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농어촌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 마을 모델 등 현장의 혁신적인 사례를 공유하였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 체계 〉



❖ 주요 추진 결과

□ 20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11일 (목) 13:00~17:1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제: 미래 성장공간, 기회의 땅: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묻다

〈주요 발표 내용〉

- 제5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에 수행된 전문지원기관의 업무 성과 발표와 함께, 농어촌의 미래 전략을 위한 정책 동향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2건의 전문가 발표와 2건의 현장 우수사례 발표, 이에 관련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아울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유공자 표창 및 어업인 소득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가 이루어졌다.
- 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의 김수린 센터장은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시행 1년, KREI 정책 지원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5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2025년 삶의질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업무 성과를 되짚고, 향후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안정적인 운영, 취약지역 컨설팅 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삶의 질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어진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형호 부연구위원은 ‘농촌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생활인구의 개념을 검토하고, 향후 생활인구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로의 전환, 관계 발굴과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설계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상규 실장은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어촌이 태양광과 해상풍



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의 최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에너지 자립마을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어 향후 디젤 발전의 재생에너지 전환, ESS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이익공유 다각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수사례 첫 번째 발표로 팜앤디 협동조합의 서동선 대표는 ‘농촌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일’을 주제로, 청년들이 곡성으로 귀촌해 마을 공동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위케이션 빌리지·기업마을·혁신가 마을 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통해 비농업 분야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농촌에 심어가고 있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을 ‘이상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실현하는 장소’로 재정의 하고, 인구 이동을 견인하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며, 정책의 KPI와 현장 활동이 일치하도록 계획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두 번째 우수사례 발표에서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전주영 이장은 ‘위기 속에서 찾은 희망: 구양리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와 농지 잠식 우려 속에서 외부 자본이 아닌 마을 공동체가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을 자산을 활용한 공동 소유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향후 영농형 태양광, ESS 확충, 공공·비축 농지와 저수지·도로 사면 등 공유지를 활용한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확산, 수익권 담보대출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마을이 재생에너지의 주체가 되어 농촌 위기를 회생의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종합토론 주요 내용〉

-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하여, 앞서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아울러 향후 농촌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의 이정민 대표는 서울 출신 문화예술 창업가로서 청년 마을 ‘돌멩이마을’을 운영하며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농촌의 공간·자원을 활용해 작업과 생계를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원주민 청년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가업 2세 농부 모임 ‘나아농’과의 공동 브랜드·브랜딩 사업 등을 기획하며, 외부 청년과

II.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지역 청년이 함께 성과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 정책·시스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황바람 전문위원은 농촌공간계획과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군 차원에서 삶의 질·에너지·공간정책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행정 내부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주체와 행정 실무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논의하는 '홍성통'과 같은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연동시키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중앙부처별 단절된 사업들을 현장에서 엮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농민신문 홍경진 정경부장은 농촌이 정신 건강과 공동체성 측면에서 도시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년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겨냥한 '농촌 유학'을 생활인구 확대 전략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연 3천만~5천만 원 수준의 소득기반이 중요하므로, 청년의 농업법인 취업 지원, 공공비축농지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REC 결합을 통한 장기 소득 안전판 마련, 고령농 중심 농촌에서 AI를 활용한 돌봄·의료·교통 서비스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규호 국회입법조사관은 생활인구 개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법률에만 묶여 있는 한계와 예산 제약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법체계와 연계해 전국 단위 통계로 확장하고 건보·국세 등 행정자료를 결합한 데이터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촌의 유희시설을 전국적으로 목록화해 규제샌드박스로 용도 전환을 촉진하고, 영농형 태양광 목표와 햇빛연금 정책은 전력수급계획·산업정책과의 정합성과 사회적 부담의 투명한 공유를 전제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상우 어촌연구부장은 귀어·귀촌 정책이 생산 중심 지원에 치우쳐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가공·관광·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어촌 정착 생태계와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어촌 생활인구의 신용카드 매출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지역공동체와의 연결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동조합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 지산지소의 에너지자립 모델, 리빙랩 방식의 갈등 관리, 어복버스처럼 소규모 실증을 거쳐 정책화하는 실험적 정책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의 권인혜 팀장은 관계인구 정책이 과거 도농교류·농외소득 중심 정책과 달리 도시민을 단순 소비자가 아닌 파트너·동반자로 위치시키며, 농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적 확대보다 관계의 질적 심화와 섬세한 케어가 가능한 매개자·연결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공적으로 지원하고, 다지역 거주, 근로제도, 농촌유학 등 자유로운 이동 및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 환경과 장기적인 평가 관점을 마련해 관계인구 정책을 하나의 사회적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무자이기도 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이아름 사무관은 청년과 도시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며 관계인구를 늘리는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소득보장, 일자리·공동체 기반 중간조직 육성, 고령자 돌봄·의료서비스 확충을 삶의 질 정책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정부가 2030년까지 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농촌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되, 신안·구양리 사례를 참고하면서 태양광 발전에 따른 경관 훼손과 사회적 비용 문제를 두고 주민·국민과의 폭넓은 합의와 민관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전문지원기관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3개 분과) 운영을 지원한다.
 - 2025년에는 본 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3회(3개 분과, 각 1회씩 개최) 개최되었다.
- 2025년 3월에는 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안) 수립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2025년 5월에는 5건의 심의 및 1건의 보고 사항 관련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보고하였다.
 - 본위원회 안건은 2024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2025년 삶의 질 시행계획, 202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결과, 2024년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와 2025년 과제 선정 및 시행계획, 2024년 사전협의 이행계획서 심의 및 2025년 사전협의 대상 사업 선정, 2023년 농어촌영향평가 후속조치 보고 등 총 6건이었다.
 - 2024년 삶의 질 시행계획 세부과제 175개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2025년 삶의 질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주요 내용과 투융자 계획 등을 검토·확정하였다.
 - 202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한 달성도 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검토·확정하였다.
 - 2024년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인 '농어촌 유희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검토·확정하였다. 2025년 영향평가 과제로 '도·농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국토교통부), 식품사막 최소화(농식품부·해양수산부)'를 선정하고, 과제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2023년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산업통상자원부)',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해양수산부)'의 영향평가 결



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내용을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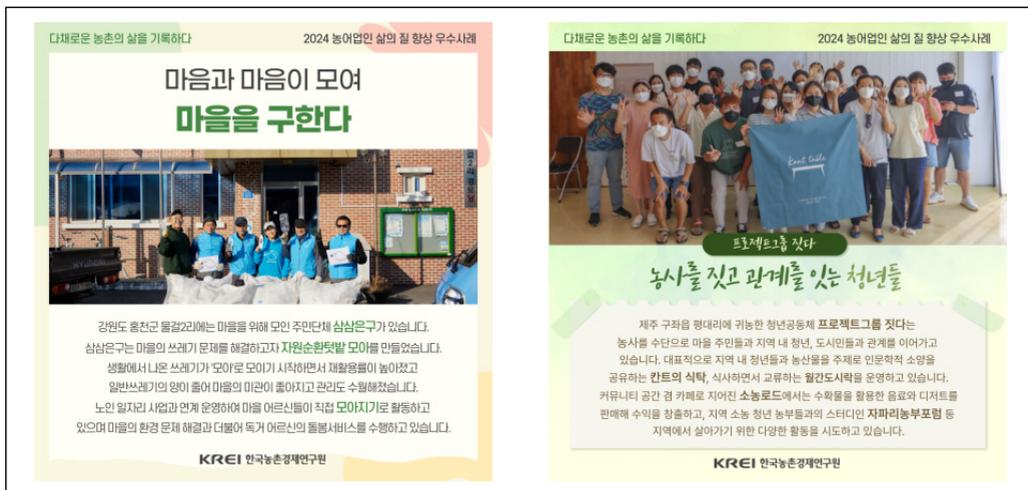
- 2025년 12월에는 2건의 심의 및 1건의 보고 사항 관련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보고하였다.
 - 본위원회 안건은 농어촌 서비스기준 개편안 심의, 2025년 사전협의 대상사업 이행계획서 심의, 2024년 사전협의사업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등 총 3건이었다.
 - 삶의 질 기본계획이 개편됨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항목 및 점검 방식 등의 개편안을 심의하고 검토·확정하였다.
 - 2025년 5월 본위원회에서 2025년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2개 과제의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서를 심의하여 검토·확정하였다.
 - 2025년 5월에 심의·확정한 2024년 사전협의의 이행계획서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내용을 보고하였다.
- 2025년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 1회씩 총 3회 서면으로 개최되었다.
 - (생활권기반 분과)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안) 및 농어촌 정주 여건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 (보건·복지 분과)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안) 및 농어촌 보건·복지 부문 여건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 (교육·문화 분과)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안) 및 농어촌 교육·문화 여건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3.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홍보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 카드뉴스

- 2021년부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및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수록 사례를 카드뉴스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 제작한 카드뉴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식블로그 및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025년에는 총 13개의 카드뉴스가 제작·소개되었다.

〈 2025년 제작 카드뉴스: 202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





〈 2025년 카드뉴스 제작 목록: 202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

사례명	게시 일자	제목
홍성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5.2.20	주민주도로 지역의 건강과 돌봄을 살피는 공동체_홍성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상수초등학교, 장목예술중학교	'25.3.20	작은 학교의 가치를 만들어가는_농어촌 참 좋은 학교
사랑그림숲	'25.4.16	장애인과 지역민이 함께 그려가는 행복한 일터_사랑그림숲
자원순환텃밭 모아	'25.4.29	마음과 마음이 모여 마을을 구한다_자원순환텃밭 모아
프로젝트그룹 짓다	'25.5.21	농사를 짓고 삶을 잇는 청년들_프로젝트그룹 짓다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25.6.20	'같이'의 '가치'로 함께해요_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룰스퀘어&롤빌리지	'25.6.23	기술과 문화가 만난 농업농촌의 미래를 엿보다_룰스퀘어&롤빌리지
마을호텔18번가협동조합	'25.7.25	작은 불씨로 시작된 마을골목 재생이 공동체의 재생으로_마을호텔 18번가협동조합
동백마을	'25.8.21	300년 전통을 이어 새로운 길을 만드는_동백마을
농업회사법인 같이	'25.9.19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 바로서기_농업회사법인 같이
진례문화발전소	'25.11.3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문화를 빛어가는_진례문화발전소
조천리 용천수 지킴이	'25.12.5	사라지는 제주의 생명수, 용천수를 지키는 사람들_조천리 용천수 지킴이
청년공동체 완망진창,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	'25.12.22	농촌의 청년문화를 조성하는 청년공동체_완망진창&편들

❖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인포그래픽

- 2023년부터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각 부문별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인포그래픽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 2025년에는 총 4개의 인포그래픽(2024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이 제작·소개되었다.

< 2025년 제작 인포그래픽: 2024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



<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인포그래픽 제작 목록 >

게시 일자	제목
2025.09.01.	2024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 실태
2025.09.29.	2024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교육·문화 실태
2025.11.06.	2024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정주 기반 실태
2025.11.26.	2024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경제·일자리 실태